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 박영호 · 김동수 · 박인휘 · 정기웅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 박영호 · 김동수 · 박인희 · 정기웅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8,000원
ISBN 978-89-8479-743-7 9334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현대일본학회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동 수 부연구위원 박 영 호 소장/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장/부연구위원 임 강 택 실장/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여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태 환 교수(국립외교원)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이 동 릉 교수(동덕여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현대일본학회	이 기 태 전문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김 두 승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송 화 섭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 김동수 · 박인휘 · 정기웅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10
3. 연구 방법 및 구성	11
II.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3
1.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15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15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19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24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24
나.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33
다.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51
3. 전문가 인식조사	101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01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특징	108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45
1.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147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147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50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54
2.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시사점 및 과제	161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161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시사점 및 과제	162

목차

참고문헌	16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3

표 · 그림목차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 김동수 · 박인휘 · 정기웅

<표 II-1> KF의 2012년 미국 내 정책연구소 지원 실적	70
<표 II-2> 2012년 9월 1일 현재 정부초청장학생 초청국가 현황: 132개국 4,004명	73
<표 II-3> KBS World Radio 북미지역 방송시간, 주파수 및 기본 편성표	89
<그림 II-1> 소속 기관	108
<그림 II-2> 업무 경력	109
<그림 II-3>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110
<그림 II-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110
<그림 II-5>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11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112
<그림 II-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113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114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114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115
<그림 II-11>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115
<그림 II-12>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116
<그림 II-13> 미국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도움	117
<그림 II-14> 미국 국민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118
<그림 II-15>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118
<그림 II-16>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119
<그림 II-17>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20
<그림 II-18>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121

그림목차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국민 인식	121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122
<그림 II-21>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123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123
<그림 II-23>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	124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125
<그림 II-25>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125
<그림 II-26>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126
<그림 II-2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127
<그림 II-28> 북한의 핵개발 의도	128
<그림 II-2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129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129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130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131
<그림 II-33> 북핵 정책 수행 시, 미국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132
<그림 II-34>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133
<그림 II-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134
<그림 II-3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미관계 증진과의 관계	134
<그림 II-37>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미국 국민의 한국 이미지	135
<그림 II-38>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동맹의 기여	136
<그림 II-39> 한반도 통일을 통한 미국의 이익 여부	136
<그림 II-40>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게 가져 올 이익	137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통일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이 처음이다. ‘평화통일외교선언’은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는 선의의 외교적 경쟁을,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산출한 비밀접촉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말까지 정상회담, 총리급회담, 장관급회담 등 각급 수준의 대화와 접촉을 총 606회 열었다.¹ 총리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장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했다. 1988년 7·7선언 이후 1989년 처음 시작된 인적·물적 교류는 많은 우려곡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분단구조는 여전하며, 갈등과 대립의 근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독립한 독일과 예멘, 베트남은 이미 통일을 이룬지 오래다. 2015년이면 독일은 통일 25주년을 맞는다. 중국과 대만 사이도 영토적 통일은 이루지 못했으나 ‘사실상의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한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 구조의 지속 상황 아래서도 남북한의 국가적 능력과 위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6.25전쟁 직후 폐허의 상황에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 현재, 세계

¹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통일부』, <www.unikorea.go.kr/viewPage.req?idx=PG0000000242> (검색일: 2013.5.10.).

12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오랜 산고 끝에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면,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를 이식한 북한은 현실 사회주의체제에서 유례가 없는 김일성 가계에 의한 독재 권력의 3대 세습을 이루었다.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하고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진행하였으나 북한은 전근대적인 유일지배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구조적 폐쇄성 속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최빈국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독재자의 권력 유지와 정권 및 체제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특히 1990년대 초 이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핵과 인공위성(미사일)’을 유산으로 남겼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자임하면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임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² 특히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³

한국의 국력 성장과 국제적 위상 증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해 넘어서야 할 근본적인 장애물은 여전하며,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중 역학관계의 변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속에서도 지역의 영토적 갈등의 분출 등 동북아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의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²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³ “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 질서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은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구상의 기본 전제다.⁴ 이러한 관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북아시아지역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부상은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 변화는 물론 한국의 통일 환경의 핵심 외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연 10%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명목 GDP 기준 일본을 추월 세계 2위의 경제대국(5조 8천억 달러)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세계 1위 인구 대국(13.8억 명), 세계 2위 군사비 지출국가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은 명목 GDP 규모가 2010년 대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50년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 구현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사회) 사회 건설의 정치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⁵ 미국이 국력의 기반 측면에서 여전히 타이탄과 같은 대국이며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⁶ 중국은 항공모함·스텔스폭격기·우주개발 등 첨단 군사력의 증대로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은 G2로서 중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자리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7~8일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오바마-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이 내세우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⁷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⁴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p. 7.

⁵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報告』(2007.10.15);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의 교 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57 재인용.

⁶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Washington, D.C.: CSIS, 2011), p. 7.

⁷ “習近平同美國總統奧巴馬共同會見記者,” 『성균차이나포커스』, 제6호 (2013), pp. 32~33.

인정하되 아직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응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2012년 4월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규정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핵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⁸ 핵을 기반으로 한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한반도의 안보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 전략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을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정부 간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한·미·중 3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형성·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현안이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의 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외교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에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외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이며, 박근혜 정부도 통일외교를 주요 국정과제 속의 추진과제로써 설정하여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외교에서는 전통적인 대미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전략동맹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향후 글로벌 파트너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중국의 입장에서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신형대국외교: 부상한 중국의 새로운 외교구상,” 『성균차이나포커스』, 제6호 (2013), pp. 2~13 참조.

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중국의 공세적 내지는 패권 추구 대외정책 사이에서 현명한 통일외교가 더욱 요청된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정책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 통일 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1세기는 국가·정부 간 차원의 외교와 함께 시민사회·민간 외교의 영역이 상당한 역할을 발휘하는 시대이며, 정보화의 수단인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시공간을 넘으며 수평적,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거버넌스에서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국은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외교를 외교의 중요 영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북한문제는 국제적으로 정책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문가집단, NGO 등의 주요 논의의제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대상국에 대한 공공외교는 해당국의 정부, 주요 단체 및 기관, 주요 정치인·관료 뿐 아니라 언론, 학계, NGO, 기업계 등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통일문제는 우리의 핵심 외교사안의 하나로 대내외 공공외교의 무대에서 빈번하게 다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주도층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한국 주도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통일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재건 지원 확보 등 통일과정상 필요한 외교적 대비도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는 2015년에 분단 70년을 맞으며, 2018년에는 남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을 맞게 된다. 우리의 통일을 향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분단 100년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일의 기반

을 보다 적극적으로 쌓기 위해서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적극적 추진이 요청된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통일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가 장기 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남북 차원의 준비와 함께 국제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 및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추세를 받아들여 외교에서 공공외교의 영역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외적 환경의 조성을 위한 통일의 교를 중시하고, 그의 일환으로써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 업무의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의 하나로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하부 성과목표로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국 대상 국제협력 및 홍보, △통일정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2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독 고위정책 협의회, 주변4국 정책협의회, 미·일·중·러·EU 등에서 국제 통일전략대화 개최, 국제포럼 개최, 해외 파견 통일주재관 주도의 한반도전문가 연구포럼 운영, 한반도미래협력대화 창설 등이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협동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공공외교 추진체계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와 예산,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아직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국이 공공외교를 외교의 창의적 혁신 차원에서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공공외교를 관장하는 고위급의 직위와 상당한 재원 및 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도 보다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⁹

또 미국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미 통일공공외교 추진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미국 공공외교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對한반도 공공외교의 정책 우선순위와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서로 조응되도록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확보이다. 넷째, 북핵문제 및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적자산의 중요성이다. 대미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동원될 수 있는 외교자산 중에서 인적자산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째,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일곱째, 통일 시점에 대한 전망과 공공외교의 효과에 대한 고려이다.¹⁰

한국 정부가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서 정부부처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과 스토리텔링과 같은 전달방법의 개발 등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얻은 시사점과 한국의 공공외교에서 통일 또는 통일관련 의제들이 얼마나 의제와 전달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미국에 대한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의 전반적인 공공외교의 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⁹ 박영호 외, 『미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180.

¹⁰ 위의 책, pp. 180~182.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적 대안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내용은, 북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대북정책 공조문제, 남북대화 관련 정책협력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6.25전쟁 사망자 및 실종자 유해 송환문제, 탈북자 문제 등 광의의 한반도 통일관련 주요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그 자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대북정책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안들의 해결이 장차 평화통일의 강건한 기반 구축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적 범위로는, 역대 한국 정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외교 또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관련 외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시대 종식 이후의 시기이며,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외교가 대북정책에서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채택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이며 박근혜 정부도 통일외교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 변수는 탈냉전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하되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시기로 범위를 설정할 것이다. 단, 미국은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첫째, 본 연구는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 검토를 배경으로 공공외교의 실제 경험사례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와 경험 연구를 병행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장 사례 및 조사를 통한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對미국 외교 및 공공외교 담당 외교관, 전문가 등에 대한 면담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완한다. 가급적 한국의 對미국 공공외교의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관찰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對미국 공공외교 담당 외교관,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현장성과 정책의 환류체계를 통해 정책투입의 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실증연구로서 전문가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공동연구이다. 전임 연구자와 학계의 관련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연구를 수행하는 협업 연구이다. 또 관련 전문가·NGO 활동가들의 경험을 연구에 반영시키는 공동 연구이다. 정례적 워크숍, 간담회, 연구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기본 입장과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제2장 2절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대해 추진해온 공공외교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對미국 공공외교 실태는 미국 국민의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그리고 한국의 對미국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실태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특히, 통일공공외교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일반 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을 준용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제2장 3절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국내의 미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3장에서는 실태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평가하고,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한반도 통일의 방법이 평화롭고 순조롭게 전개되며, 또한 그 시기 또한 앞당기겠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의지를 정책수단으로 구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북한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이 쉽지 않고, 또한 정책적 자율성을 가까스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생존의 핵심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개발전략’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 미중 간 새로운 관계 정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신뢰할만한 정책수단의 하나이고,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¹¹

안타깝게도 현 수준에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사회 각층이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미래 통일과 관련한 거시적인 관점의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반도 미래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지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는 현재 매우 저발전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 종식을 전후로 하여 과거 서독이 미국을 핵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한 매우 역동적인 통일외교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한국 통일외교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¹²

¹¹ 박명규 외,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2012), pp. 114~115.

¹² W. R. Smyser, *From Yalta to Berlin: the Cold War Struggle Over German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pp. 351~396 참고.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실태를 ‘목표의 차원,’ ‘내용의 차원,’ ‘행위자의 차원,’ 그리고 ‘추진체계의 차원’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특징과 문제점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목표의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우방인 미국을 활용하여 북한을 상대로 한국이 중심이 되는 통일과정의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통일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안보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수준의 목표가 한미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인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역사,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한미 양국이 공유한 가치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이상과 같이 정의된 통일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미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³

다음으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와 관련하여 ‘내용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수준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미 통일외교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성과와 실패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미 정상간 합의된 주요 문서나 성명서, 정부 간 주요 대화내용, 민간전문가들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미 통일외교의 내용들을 사후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⁴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정책 영역의

¹³ 이와 같은 해석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2012 한미동맹 자료집』 (서울: 국방부, 2012), 1장, 2장 참고.

¹⁴ 최근 들어 통일외교 일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외교관계를 반영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공공)외교 관련 연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Hwang Eui-Gak, *The Search for A Unified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New York: Springer, 2010) 참고; Sunhyuk Kim and Wonhyuk Lim, “How to Deal with Sou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CSIS, Spring 2007), pp. 71~82.

트랙이 존재한다.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의 문제와 관련한 정책 영역이다.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비핵화를 이뤄내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상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비핵화와 관련한 정책 영역이 핵심 사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정책 영역의 하나로 ‘북한 정상화방안’과 관련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일탈성을 바로잡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對북한 관여정책을 바탕으로 한 북한사회의 정상화를 이뤄내지 않고서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대북한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문제’ 및 ‘북한의 정상화 문제’에 이어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결합(혹은 통합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미통일외교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 남북한 결합의 단계적 발전 과정, 정치·경제·사회적 통합(결합)의 연계성, 통일과정에서의 주변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통일외교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 정책 영역은 대체로 거시적으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영역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¹⁵ 물론 우리 국민 중 일부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을 ‘북한의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급변사태와 같은 북한의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로 상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목표는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과정의 합목적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많은 변화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경우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및 혹은 통일외교 관련 행위자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태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 실태를 ‘행위자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정부부처(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내 한반도 문제 관련 대미협력 부서, 1996년 이후 미국에 파견되고 있는 통일안보주재관, 또한 학자, 전문가, 기업종사자, 언론인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행위자, 그리고 NGO, 학생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부행위자, 민간 행위자, 시민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통한 실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들 세 부류의 행위자는 다양한 층위와 참여 수준에 의해 다시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세 가지 영역의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대미 통일공공외교라는 영역 안에 분명하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서로 명확한 분담체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라는 정책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통일공공외교의 확대, 한미 공조체제의 효율성 제고, 통일 환경 기반 구축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미 통일외교를 ‘추진체계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는 ‘일방적(unilateral) 추진’과 ‘양자적(bilateral) 추진,’ 그리고 ‘다자적(multilateral) 추진’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방적 추진의 경우는 우리의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내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집단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외교는 그 성격상 정책수용집단(policy target group)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외교정책 영역과 비교하여 특히 일방적 추진체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적 추진의 경우 말 그대로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협력이 다양한 양자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다자적 추진의 경우 ‘6자회담,’ ‘유엔안보

리, ‘한·미·일 협력’ 등 제도적인 완성도의 수준은 서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다자외교의 행위자가 되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는 ‘정부행위자 중심성,’ ‘북핵문제 중심성,’ ‘위기관리 중심성,’ 그리고 ‘리더십 관계에 종속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정부행위자 중심성’의 경우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 속하는 관계로, 통일외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 북핵위기에 대처, 북한문제를 둘러싼 대중국 관련 협조체제 등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대미 통일외교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의식이 부재한 관계로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가 다양한 사안들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대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특정 사건 이후 사후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통일 외교의 내용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최근에는 1.5 트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부기관과 연계된 참여, 즉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전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미 통일외교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의 대미 통일 외교는 대부분의 경우 북핵문제와 연동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통일외교의 내용은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매우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전개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여타 영역의 정책논의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대미 통일외교의

I

II

III

다양한 측면을 북핵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이 우리 통일공공외교의 지배하는 중심 변수(commanding variable)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문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분야는 거시적으로 ‘비핵화’ 관련 분야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관련한 ‘핵 이외의 포괄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 두 가지 정책 영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 및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⁶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핵문제의 중대성으로 인해 북한의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의 중요성이 소멸되는 현상이 발견되곤 하는데,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인 ‘위기관리 중심성’은 두 번째 특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북한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 안보차원의 함의 또한 북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탈 한반도적 의미 등의 이유로 인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⁷ 따라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거나 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요청한다거나 등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보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위기 및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관리’를 통일외교의 중심에 두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일정한 위기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통일공

¹⁶ 박인휘, “한반도 안보-안보부재의 정치학: 한미-남북 관계의 모순적 결합,” 『한국정치학 회보』, 제45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11), pp. 242~244.

¹⁷ Christoph Bluth,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Potomac Books, 2011), pp. 141~176.

공외교가 보이는 ‘위기관리 중심성’이 북한의 전략적 의도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생존전략이 우리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내용이 ‘양국 간 리더십 관계에 종속적’이라는 특징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탈냉전 2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미 간 외교관계는 보편적인 국가이익에 기반한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양국의 정상 및 국가리더십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외교관계의 방향성 및 내용이 규정되는 경우도 많았다.¹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과거 다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내면적으로는 반미적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의도하지 않은 이중성을 보임으로 인해 이러한 성향이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양국의 정책 사이에 다양한 영향을 준 사실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은 동시에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정책 추진 과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통일에 대한 비전의 부재이다. 현재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사회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가겠다는 비전이 부재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탈냉전기 20년 동안 다양한 이념적 정체성 및 리더십의 특징에 기반한 다양한 대북정책이 구사되었지만,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¹⁸ 박인휘, “박정희, 김대중의 국가이익과 한미관계: 동맹-자주의 분절 혹은 통합,”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 (세계지역학회, 2010), pp. 25~30; 조동준, “외교정책결정자 심리 분석의 유용성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pp. 197~222.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한 대북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¹⁹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지난 오바마 정부 1기 동안 추진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역시 미국이 처한 ‘대북정책 부재’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비전의 부재는 통일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전략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통일외교는 한반도 분단의 형성 및 발전과정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통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못한 제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측면이 있다. 통일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외교와 관련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통일외교를 가시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한반도 통일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비전과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외교의 실종과 비전과 전략이 전제된 통일외교의 최소화는 분명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는 정부 주도의 매우 단선적인 루트를 통해 이뤄지는 관계로 미국 사회에서 對한반도 정책의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회, 싱크탱크, 민간전문가 등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외교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는바 미국은 행정부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양립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한 관련 중요 정책의 경우 의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 사회 권력의 제5부로

¹⁹ 현재 우리 정부는 1989년 국내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일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동안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 적용성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싱크탱크는 수도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회와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의 부재는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및 전략 부재와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민간전문가 및 민간경제인을 중심으로 사적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한미관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대미 통일외교에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시 후술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문제점으로 특정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도한 영향을 받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한미 양 정부가 한반도 평화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 역시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²¹ 다만 그러한 거시적인 합의 하에서 과거 다양한 정부를 거치면서, 개별 정부가 추진한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의 우선순위라든가 혹은 정책수단의 다양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이견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김영삼-클린턴, 김대중-부시, 노무현-부시, 이명박-부시 및 오바마 등의 리더십 관계를 분석해 보면, 북한문제 특히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불협화음의 결과가 과거 북한으로 하여금 ‘통미봉남’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의 문제점인 셈이다.

²⁰ 박인휘, “세계화시대의 외교정책과 싱크탱크: 정책지식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정치논총』, 52집 2호 (국제정치학회, 2012), pp. 93~116.

²¹ 위의 글, pp. 31~33.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1) 미국 국민의 對한국 인식

미국 국민의 對한국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어렵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유추하는 작업은 객관적인 엄밀함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의 對한국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북한문제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사안에 중점을 둔 ‘對한국 인식’이라는 측면과, 한편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한반도 문제 대한 접근이라는 차원에서의 ‘對한국 인식’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북한 문제와 연동된 對한국 인식’과 ‘북한문제와 연동되지 않은 對한국 인식,’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한국을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인식하느냐, 아니면 한국을 동북아(혹은 동아시아)라는 보다 광의의 지역적 설정을 통해 이해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를 하나의 독립적인 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동북아라는 보다 상위의 지역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접근법의 경우,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의 對한국 인식은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對한국 인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국인의 인식에는 한미관계의 군사중심적인 속성, 주한미군 문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생명과 안정, 그리고 미국이 맺고 있는 다른 동맹관계와 비교하여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성과 등의 관점에서 한국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탈냉전기 이후에는 미국인의

對한국 인식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부분이 핵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²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북미 간 대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 최초의 안보논의창구가 생겨나면서, 특히 미국의 對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북한 변수가 마치 상수처럼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관점이지만 조금 더 관점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문제에서 벗어난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對한국 인식은 한미동맹이라는 군사동맹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적 관점이 한국을 인식하는 경향 속에 더욱 두드러지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문제, 사회문화적 관계, 지식의 교류와 젊은 세대의 교류,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한미 외교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들에 걸친 상호의존작용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동맹이론(alliance theory)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맹국 간에는 두 가지 차원의 게임이 존재한다. 하나는 동맹국과 적대국 사이에서 전개되는 게임으로, 군비경쟁, 위협의식, 군사배치, 군사훈련 등과 같은 사안들을 놓고서 진행되는 게임을 말한다. 또 하나의 게임은 동맹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 내부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의미하는데, 군사비분담,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SOFA), 연루와 방기(Entrapment and Abandonment) 등과 같은 이슈들이 대표적인 동맹국 내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소개한 미국의 對한국 인식이 북한문제와 연동되어서 작용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북한 변수와는 무관하게 작용하느냐의 문제를 동

²² David Kang and Victor Cha, “Think Again: North Korea,” *Foreign Policy* (March 2013);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Arlington, Virginia: Ecco, 2011).

이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게임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³

둘째, 한반도를 독립적인 공간의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광의의 지역적 범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을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객관화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 공간에서만 생각한다면, 미국인의 對한국 인식은 한미 근대외교 관계 130년의 역사 그리고 한미동맹 60년의 성과 등의 차원에서 미국의 對한반도 관계 자체의 교훈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관계 혹은 다양한 형태의 외교관계와의 비교를 통해 한미관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자 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對한반도 관계를 통한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측면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8년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즉,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문제 등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과거보다 훨씬 증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성의 증대는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라는 고유한 정책 영역 속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고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비전의 정립은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이 차지하는 고유한 영역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은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독립적인 정책영역으

²³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집 3호 (국제정치학회, 2011), pp. 1~28;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집 2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04), pp. 63~94.

²⁴ Evans J. R. Revere, “The U.S.-ROK Relations in President Obama’s Second Term: Managing Challenges and Changes,” *Brook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2013).

로 존재하지 않고, 미국의 對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관점 하에서 한국을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주지하는 바 한반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미국의 對아시아정책, 미중관계, 미국의 글로벌 전략 등과의 연계성 속에서 미국의 對한국 인식은 형성된다.²⁵ 특히 2011년을 전후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또한 최근까지 레토릭의 차원에서만 머물던 G2라는 새로운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의미와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로서의 한국은 미국인의 對한국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복합적인 외교관계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훨씬 복합적인 이익구조(interest structure)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중관계, 북미관계, 북·미·중관계 등과 같은 외교적 맥락에 대한 분석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및 동아시아적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미국인의 인식은 경우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국가 이익과 위배되거나 우리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국민의 통일관련 對한국 인식

미국 국민의 통일관련 對한국 인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對한국 인식’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미국인이 상정하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일된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통일된 한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존중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²⁵ David Kang,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Pacific Focus*, Vol. 24, No. 1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09), pp. 1~21.

통일관련 미국 국민의 對한국 인식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주변국들의 對한반도 통일관련 인식보다 훨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 다수는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임은 물론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향후 어느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에는, 많은 국민들이 중국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질문과정에서 어떻게 문항을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성원을 크게 의문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향후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핵문제 등에 대해 중국이 취하는 전략적 스탠스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라기보다는 중국의 역할과 입장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일관련’ 인식이라는 표현 속에는 핵문제, 통일과정의 문제,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이익과 가장 적극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반 국민 및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거부감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핵문제는 동아시아 전체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안보파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⁶ 결과적으로 통일관련 미국의 對한국 인식은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에 대한 더욱 강한 친근감과 우호로 전환된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미국인의 인식 속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북핵문제 중심성’이라는 요소가 잘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국민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이 맺고 있는 많은 동맹관계 속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의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발전이 통일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다원주의 등과 같은 가치들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잘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은 비단 한반도 사례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든 외교관계에서 희망하는 보편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다.²⁷ 미국은 매우 가치 지향적인 사회이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국가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지난 60년의 동맹 역사 속에서 한국이 성취한 괄목할만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발달이 상당 부분 한미동맹의 결과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당수

²⁶ Dina Smeltz, *Foreign Policy in the New Millennium: Results of the 2012 American Public Opinion and the U.S. Foreign Policy* (Chicago: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2) 참고.

²⁷ Alexander T. J. Lennon and Camille Eiss,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IT Press, 2004) 참고.

미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 서구적 정치이념 및 다원주의 가치의 확산, 시장경제질서의 승리 등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미국인의 이러한 경향은 동맹관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오늘날 가치동맹적 속성을 가지는 미일 동맹의 사례에서도 잘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미국의 핵심 고려사항은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북중관계, 한중일 역학관계, 미중 간 글로벌 경쟁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은 예기치 않게 동북아 지역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정확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동북아 역학 변화 사이의 연관성은 미국에게 적잖은 정책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미국은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핵심 정책수단이기를 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핵심 전략수단으로 기능해 주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북핵문제와 같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요인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적절한 수준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영향력 확산을 막는 의미 있는 기능을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3) 미국 국민의 한미협력 인식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미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한미협력’ 인식의 경우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적 차원의 한미협력과 관련한 인식이고 또 하나는 탈 한반도적 차원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한미협력과 관련한 인식이다.

우선 한반도적 차원의 한미협력의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접근을 전제로, 한미동맹 차원, 경제사회 차원, 주변국과 관련된 차원 등을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한미협력 관련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한미협력에 대한 인식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관계가 과거의 군사 중심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론 많은 미국인에게 한미동맹의 핵심 정책 영역은 군사 분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한미협력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크게 ‘핵문제 해결’과 ‘북한사회 정상화’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지곤 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한미협력은 상대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다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사회 차원에서 미국인의 한미협력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의 인식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즉, 무역, 금융, 사회교류, 과학기술, 교육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어느 일방이 불균등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균등성과 호혜성이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한미 양국은 FTA체결, 원자력협정 논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의 외교관계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대방 사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보다 심화된 양국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미동맹 차원의 한미협력이 상대적으로 정부 중심적인 협력체제라고 한다면,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한미협력은 비정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협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한미협력의 경우, 미국이 상정하는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한미협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미중관계 혹은 미일관계와 같이 미국이 설정하는 다른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한미협력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올 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써, 양국 정상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관계의 협력이 두 국가의 국가이익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미국 국민의 한미협력 인식 속에서는 한국을 과거보다 더욱 유력한 동맹 파트너의 하나로 수용하면서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수년 전 우리 정부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험한 국론 분열과 국가 에너지 소모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미중관계 및 미일관계의 맥락 속에서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접근과 이해 등을 토대로 한 한미협력 인식이 있다. 이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중국을 적절한 수준에서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관련하여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있고, 또한 미일관계의 경우에는 최근의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과 같이 기본적으로 한·

²⁸ 김현욱,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13).

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한미협력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 세력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구도이므로, 통일과정에서 가능한 한미협력 역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1) 목표

우리의 통일공공외교는 ‘한국 정부 및 민간 주체가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외교자산으로 활용하여 상대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열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비전통적 외교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를 토대로 미국의 역할 및 한미동맹의 기능과 관련한 통일공공외교 목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한미협력)은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만한 외교자산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미국 내에 그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물론 UN,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기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개별 통일공공외교 사이에는 차별적인 목표가 존재할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가장 신뢰할만한 우리의 외교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I

II

III

통일과정에서 여타의 안보과외요인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미국을 우리의 핵심 지원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안정성이 깨지지 않도록, 또한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의 안정성을 이유로 한반도 통일과정에 불필요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미국을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 행동의 불가예측성 및 일탈성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주변국의 입장이다. 특히 국경을 접한 중국이나 북한의 핵개발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경우에 따라 동북아 지역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 여하한 이유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 통일정책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동북아 지역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역내 국가들이 불필요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위한 통일공공외교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현안이 되었다. 또한 통일과정에는 국제법적 고려 및 북한의 경제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 UN, IMF 등과 같은 글로벌 행위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목표로 한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체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주체는 대략 정부, 국회, 학계 및 전문가,

언론, 기업, NGO, 개인 등 7부류의 행위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통일공공외교 내용과 관련하여 이들 7개 행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기능별 특징 및 참여 방식에 따라 추진주체의 구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정부

본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통일외교가 가지는 북한문제라는 이슈의 특성상 통일공공외교 영역에서 ‘정부 중심성’이라는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역시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정부’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오래지 않은 관계로 정부 중심의 통일공공외교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역할 분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 내 부처들 간 협의방식도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와는 외교관계의 상황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대만 등 미국을 상대로 사활적 국가이익을 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우리 정부가 담당하는 통일공공외교의 기능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⁹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통일외교를 전담하는 부서 자체가 없다는 점이고, 비록 공공외교의 특성상 특정 전담부서의 설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통일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²⁹ Dean P. Chen, *US Taiwan Strait Policy: The Origins of Strategic Ambiguity*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12), Ch. 1;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MacMillan, 2008), pp. 49~55 참고.

미국의 경우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차관이 존재하며, 해외에 설치된 모든 외교공관에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국장급 부서를 두고 있다. 통일공공외교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하되 다양한 민간기관도 참여시킨 '통일외교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그 하부 기능의 하나로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국회

통일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예측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래 통일과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또한 미래 통일 시점에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과정을 통한 '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설사 이슈에 따라 구지 입법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국회는 정책결정의 논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가장 포괄적 논의가 가능한 곳으로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국회의 경우 북한문제 및 통일외교를 포함하여 특히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그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현재는 한미 의원들 간 정기교류, 미 의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국회의 단기교육, 의원 개개인의 네트워크, 그리고 기타 입법과정에서의 한미 간 조율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미 통일공공외교란 관점에서 우리 국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³⁰

참고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³⁰ 예를 들어, 미국 의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교류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주관하는 보좌관 초청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이 주관하는 의원보좌관 초청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사업은 최근 들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사업 역시 2010년 이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과정상의 목표를 설정한다고 할 때, 과거 미국이 추진한 매우 다양한 체제 전환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전개한 수많은 체제 전환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 의회가 담당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향후, 대미관계에서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우리 국회는 미국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맺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對한반도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 국회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역할은 향후 더욱 전문화되고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계 및 전문가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협력관계가 가장 왕성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학계 및 전문가들에 의한 통일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내 학계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회와 루트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 주체들에 의한 통일공공외교가 정교한 계획과 거버넌스적 운영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 간 학계 전문가들 사이의 왕성한 교류는 통일공공외교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대학, 국책연구소, 민간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각종 공개 및 비공개 학술회의, 워크숍, 공동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해 미국 내 대학, 연구소, 싱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정보, 의견, 지식을 교환한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통일비전 및 정책

에 대해서 미국 내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정책결정과정에서 워싱턴에 소재한 싱크탱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학계 및 전문가들의 통일공공외교 기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몇 년간 진행되다가 종료되기를 반복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라) 언론

언론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언론이 국제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역시 한반도 및 북한문제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내 언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협조체제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언론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상주하면서 대부분의 국제 뉴스원(news source)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추진 주체로서 언론을 상정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언론은 매우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일간신문 18개사에서 파견한 해외특파원 규모는 총 65명, 방송사는 5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단일 회사가 상주 특파원만 200명에, 400명 이상의 자유계약직 특파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언론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외뉴스를 개발하고 취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해외 특파원의 많은 수가 미국에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다른 주요국의 미국 내 보도활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공공외교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미국 내 한국 언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생각과 고민을 국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한 우리 정부, 민간 전문가, 기타 관여자들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 논의와 관련한 매우 적극적인 소개 및 설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기업

민간 기업은 특별히 통일공공외교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관계에 놓여 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업 역시 매우 중요한 통일공공외교 주체가 아닐 수 없다.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한 기업의 역할은 한미 간 안정적인 외교관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임은 물론, 향후 통일된 한반도와 미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전경련 산하 ‘한미재계회의’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987년부터 매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한미재계회의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들을 기업들 차원에서 타결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미재계회의는 미국 내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밴플리트 상(James A. Van Fleet Award)’을 수여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한미재계회의가 한미 양국 간 보편적인 외교관계의 우호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기업의 경우 한미 민간외교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 NGO 및 이익단체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로 비영리단체 및 이익단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주체들과 비교하여 활동의 영역이 포괄적이거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몇몇 비영리단체의 경우 특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미협회’(대표 한승주), ‘한미클럽’(대표 봉두완), ‘한미친선협회’(대표 한철수), ‘한미우호협회’(대표 한철수), 그리고 ‘한미동맹친선협회’(대표 서진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의 경우 비록 미국 내 폭넓은 대중을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특화된 목표집단(target audience)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미국 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주체와 보이지 않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 개인

마지막으로,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참여하는 주체의 하나로 개인을 들 수 있다. 한미동맹이 60년의 시간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는 매우 다양한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미국 내

유학, 사업 활동, 주재원 근무, 공직 경험 등 다양한 유형과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인이 앞서 설명한 주체들처럼 정부, 기업, NGO 등과 같이 제도화된 일원으로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제도적인 주체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들 개인의 경우 본인 스스로 우리의 통일정책을 미국 내 대중 혹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한다고 보기에 무리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라는 주체가 접촉하는 미국 내 인사 혹은 개인이라는 주체가 관여하는 인적 네트워크 등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자원 및 자산

다음으로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원 및 자산이 활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공외교의 특성상 어떤 외교정책 수단보다도 다양한 외교 자원 및 자산이 동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외교라는 측면과 공공외교라는 측면이 동시에 가장 잘 반영되는 자원 및 자산만을 소개기로 하겠다.

(가) 지식자산

미국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통일공공외교의 경우, 미국 내 여론주도층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식자산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대북 관여정책을 둘러싼 정보와 지식, 한국 및 미국 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유사한 교육과정, 동맹 60년 동안 축적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대 등은 현재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I

II

III

특히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 이후 과거 냉전기 때 이념적 유대감이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자산이었다면, 탈냉전기 이후에 들어서는 지식공동체라는 유대감이 외교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핵심 외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인지공동체’ 혹은 ‘지식공동체’로 알려진 지식자산의 활용은, 유사한 데이터, 정보, 지식, 가치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공통된 문제의식과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북한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매우 적극적인 지식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공공외교에 기여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한국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으로 미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약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미국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 활동 지원은 양국 간 지식공동체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통일공공외교 자산으로 활용케 만드는 의미 있는 노력으로 알려져 있다.

(나) 네트워크 자산

위에서 설명한 지식자산과 함께 대미 외교관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외교 자원의 하나는 한미 양국 간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자산이며, 힘의 중심이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힘의 중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60여 년간 축적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인적 관계, 제도적 관계, 정부기관 차원의 관계, 기업 간 관계 등 다양한 영역과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내의 지한파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한국의 통일전략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미국 내 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 OKF)은 이러한 목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한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한미 간 네트워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궁극적으로 미국 내 다양한 여론 선도층에게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차원에서 통일공공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 문화자산

한국의 문화유산이 외교자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문화자산이 어떠한 외교 수단 맥락에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특히, K-pop의 확산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미국 사회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전적 문화자산이건 현대적 문화자산이건 문화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은 미국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 중심의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들어 주요 문화자산을 유네스코 등에 등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자산이 자칫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딱딱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식, 전통의상, 전통가옥 등 매우 다양한 문화자산을 외교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의 이러한 노력이 통일공공외교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통일과정을 당연시하고 또한 지지하게 만듦으로써 통일공공외교 효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I

II

III

(4) 매체

미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통일공공외교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통일공공외교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의 모든 외교 활동이 통일공공외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달 매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으로 통일공공외교를 협의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과관계 속에서만 파악한다면, 통일공공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매체만을 선별하는 작업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관련한 매체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표적으로 인적 방문과 같은 고전적인 ‘면대면 접촉’을 통한 매체, 언론 및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수단’을 통한 매체, 그리고 각종 회의, 포럼,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전문화된 의사전달수단,’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매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면대면 접촉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약 1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약 45~50% 정도의 사람들이 관광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방문자들의 경우 유학, 공무, 사업, 연구조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일일이 미국 내 어떤 인사를 만나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어떤 대화를 나누며, 그 결과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맹 60년을 넘어가는 한미 양국 간 독특한 동맹역사에 견주어 볼 때, 또 양국 간 군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그야말로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인적교류와 방문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미국인들 가운데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국 간 다양하고 많은 인사들에 의해 직접 방문하고 만나는 기회는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매체로 볼 수 있다.

(나) 미디어 수단

1) 언론

다음으로 언론은 우리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매우 중요한 매체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한국의 언론과 미국의 언론 모두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즉, 양국의 언론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매체로 함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한국의 언론은 정책결정자를 포함하여 미국 내 주요 여론 선도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반도 통일관련 정보소스라는 관점에서, 통일공공외교 관련 핵심 매체이다. 한국에 주재하거나 왕래하는 주요 미국 인사들은 한국의 언론 보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언론인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통일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언론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의 여부 역시 우리의 통일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체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미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떠한 맥락에서 보도하고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적극성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통일공공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2) 인터넷

언론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수단의 ‘여론형성 및 전달’ 매체 역시 통일공공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정책 관여자의 이념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논쟁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전달 매체인 ‘언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전문가 및 대중은 국내 인터넷은 물론 미국 내 인터넷 공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알려진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북한 언론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북한관련 사이트³¹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의견교환 통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사용을 통해 우리의 통일비전과 정책을 미국 내 관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 전문화된 의사전달 수단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한 또 다른 매체로는 강연, 포럼, 회의, 공동연구 등 우리의 전문가가 미국 내, 일종의 특화된 여론수용집단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 ‘전문화된 의사전달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미관계는 지식의 공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차별화된 특징을

³¹ <www.nkleadershipwatch.worldpress.com>, <www.nknews.org> 등이 이에 속한다.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 혹은 관련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별적 대중을 대상으로 한 양국 간 의사교환 채널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 관여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연간 수많은 강연, 포럼, 학술회의, 공동연구발표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런 행사와 의사전달채널은 최초 목표로 하였던 여론수용집단은 물론 지역 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고 또 불특정 다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가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5) 대상

(가) 행정부

미국 행정부와 관료는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 대상 집단이다. 실제로 행정부는 정책의 추진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통일공공외교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선거로 인해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바뀌고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핵심 국가이익과 관련한 정책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 국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미래 통일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이라는 미국의 이해관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도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백악관 안보실 등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부서의 역할은 한미관계 혹은 북미관계라는 양자적 차원에서의 기능도 담당하지만, 미중관계 및 미일관계 혹은 미국과 국제사회 간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

I

II

III

통일의 지지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통일과정에 사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통일비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일부 행정부에서는 한미 양국의 국가리더십의 성격 차이로 인해 북한문제에 대한 의도하지 않는 입장차이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후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조금씩 확보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통일공공외교는 ‘통일문제’라는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관계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전작권문제, 한미 FTA, 방위금분담금 문제, 각종 외교 및 군사협정 문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책영역에 걸친 협조를 통해 ‘통일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나) 의회

미국의 의회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의회는 기능적 특성 상 입법 활동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관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 혹은 다른 비전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의회에 전달되고 또한 입법과정에 녹아들게 된다. 따라서 미 의회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야말로 막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 미 의회 내 지도자,

정책보좌관, 의회 내 연구기관(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등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과정은 의견수렴, 입법화, 최종법안형성, 행정부와의 의견조율 등 매우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의회의 인사들이 이들 단계들 중에서 어떠한 단계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회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이면서도 전문화된 통일공공외교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한미 의원들 간 인적 네트워크, 외교부에 의한 미 의회 보좌관 연수프로그램 등 서로 통합되지 못한 분절적인 외교방식만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학계 및 싱크탱크

미국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 대상으로 삼아야 할 또 다른 기관으로 학계 및 싱크탱크를 꼽을 수 있다. 북한 및 한반도 문제가 가지는 이슈의 전문성으로 인해 학계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경우 ‘싱크탱크(think tank)’라는 소위 미국 권력의 제5부로 알려진 집단의 영향력 역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학계 및 싱크탱크 인사들은 각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부를 포함한 주요 정책기관에 수시로 참여하는 ‘회전문인사(revolving door effect)’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미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내 학계 및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비교적 적극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 및 싱크탱크 내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자 그룹 및 싱크탱크는 미국 내 카운터파트를 설정하여 한미 간

I

II

III

네트워크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거나 혹은 미국 내에 매우 제한적인 전문가만이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미국 내 다양한 민간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인사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하여 조직적인 지원 및 연대가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라) 언론

우리의 통일비전 및 통일정책을 미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알리고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내 언론인은 주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는 언론보도의 특성 상 우리나라처럼 전국지 개념의 신문가가 다수 존재하지 않음으로, 뉴욕타임스 및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전국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경우 1면 기사 대부분이 국제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연간 1면 머리 기사로 미국 국내 뉴스가 보도되는 경우는 대체로 30% 내외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의 주요 언론이 국제정치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통일공공외교 추진과정에서 미국 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 언론 및 언론인을 상대로 효율적인 통일공공외교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특성상 특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통일공공외교정책을 전개한다는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주변국 일본, 대만 등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기업, 민간인, 시민사회 NGO 등 다양한 주체가 미국 언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미국 시민

미국 내 불특정 다수 즉 일반 대중 역시 매우 중요한 통일공공외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로 인해 이제는 많은 미국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내 시민, NGO, 특히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매우 간헐적으로 미국의 대중, 교사집단, 청소년, NGO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와 맞닿아 있는지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미국은 한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외교적 관계 강화의 중심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한반도 안보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왔던 것이 한국 외교의 오랜 전통이었으며, 이와 같은 한국 안보외교의 핵심은 주로 한미동맹관계 강화에 놓여 있었다.³² 탈냉전 이후 한미의 안보적 유대관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상존하는 북핵 위협과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에서 그 근본적인 관계가 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공공외교의 등장과 중시경향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접근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국의 공공외교가 문화라는 기제에 치우쳐 왔던 까닭에³³ 통일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³² 김기정 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12), p. 51.

³³ 위의 글; 박철희, 『한국 공공외교의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11).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는 안보중심의 냉전형 정무외교와 경제 통상에 치중했던 중상주의형 경제외교의 전통적인 틀에서 확대 발전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 비핵화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공공외교를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 내용은 ‘한국의 비핵평화, 경제발전, 민주주의, 갈등 및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인권문제 등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슈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집단으로는 ‘정책서클, 여론주도층, 차세대, 일반대중, 미디어, 글로벌 스페이스’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공공외교는 한국의 안보여건을 개선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과 평화노력 및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이 제시하는 평화통일방안, 북핵문제 해결책이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군축노력 등을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담론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표준으로 선택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행해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이 이와 같은 방법론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공외교의 확산 자체에 치중하느라 구체적인 방법론적 정치함을 갖출 수 없었던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 범위가 통일로 한정되었을 때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외교를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대별하였을 때 한국보다 강대국이고 물질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실질적 공공외교 수단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접근법과 지식외교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적 접근은 광범한 의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생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지확보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 의미에서 통일과 문화적 접근을 연관시키는 것은 수월치 않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접근에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지식외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사와 지식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 수단으로서 작동해 왔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주체는 크게 정부행위자(state actor)와 비정부행위자(non-state actor)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행위자는 다시 온전히 공적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는 1트랙 행위자와 산하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소와 같은 1.5트랙에 해당하는 행위자들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의 행위자들, 즉 소위 비정부행위자로 통칭되는 행위자들은 2트랙 행위자로 분류된다. 이들 행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절에서는 크게 지식외교, 문화외교, 스포츠외교, 미디어외교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1) 지식외교 추진실태

공공외교의 하위형태로서의 지식외교는 일반대중보다는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매체로 하여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지식외교는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아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행위를 포함하며, 사회적 반향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³⁴ 여기에서는 지식외교에 인사교류,

³⁴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1).

포럼외교, 세미나개최, 정책연구지원 등을 포함시킨다.

(가) 정부 차원

통일공공외교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실행의 주도권이 주로 정부행위자에게 있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본장 후반부의 전문가 설문조사의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5%의 응답자가 ‘정부 주도형’이라는 답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정부행위자가 주도하고, 비정부행위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공공외교의 실행에 있어 누구 혹은 어느 부처를 가장 주된 정부행위자로 지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 공공외교의 주행위자는 외교부이며,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주무부서는 통일부이다. 따라서 이 두 행위자 중 어떠한 행위자가 더 주요한 행위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활동까지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외교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한 국가의 이미지를 해외에 전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수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수반은 타국 방문 시 공식 연설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와 정책내용을 타국의 정부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매우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각국 정상외의 타국 방문 혹은 다자외교무대에서의 참석은 불특정 다수, 특히 상대국의 일반대중들을 향한 공공외교적 메시지 발신의 좋은 기회로서 작동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13년 5월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0분간 영어로 연설을 진행했으며, 그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관계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지역 협력 방안 등 포괄적인 현안들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며 제시한 3가지 비전과 목표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미 의회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매우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훌륭한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연설 중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의 의원들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한국전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도움을 잊지 않는 보은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DMZ에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짓겠다는 아이디어의 언급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징적 언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성 김 주한 미대사는 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미국 의회가 외국 정상을 초청하여 이와 같은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면서 “박 대통령이 유려한 영어로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반응들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도 훌륭한 대미 통일공공외교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교부

외교부 내의 공공외교 담당부서는 문화외교국, 대변인실, 정책기획국,

I

II

III

178개 재외공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등이 있다.³⁵

외교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안보외교,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동력 확보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복합외교를 통해 전통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³⁶ 그러나 외교부의 주요정책목표와 이슈별 자료실을 검토했을 때 통일공공외교가 별도의 항목으로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게 여겨진다.

외교부가 일반적 공공외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ODA와 지식외교, 문화외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그 지식·경제·군사적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수단은 문화외교와 지식외교에 치중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1개의 대사관과 13개의 총영사관, 그리고 1개의 유엔 대표부가 자리하고 있다.³⁷ 이들 대사관과 영사관은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실행자들이며, 특히 한국문화원은 대미 한국 공공외교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주요사업을 이슈별로 구분하면, 한미 군사안보 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핵우산제공(확장억지), 캠프 캐롤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 미국의 대북제재, 미 연방의원 방한 초청사업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통일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 연방 의원 방한 초청사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또한 한반도 통일과 북한

³⁵ 산하기관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본 책 pp. 63~76에서 다루고 있음.

³⁶ <http://www.mofa.go.kr/trade/purpose/keynote/index.jsp?menu=m_30_10_10> (검색일: 2013.10.31).

³⁷ <http://www.mofa.go.kr/introduce/abroad/information/installation/index.jsp?mofat=001&menu=m_70_30> (검색일: 2013.10.31).

핵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통일공공외교 혹은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범주에 포함된다.

가) 미 연방 의원 방한 초청 사업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 동맹 관계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한미 양국 의회 간 인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미 의회 내 한국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및 지지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주관 하에 미 연방 의원 초청 사업(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 CMEP)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적 실시를 통해 미 의회와의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對한국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 2011년 3월 로레타 산체스(Loretta Sanchez) 하원의원이 방한하였고, 동년 4월에는 탐 리드(Tom Reed) 하원의원과 카렌 바스(Karen Bass) 하원의원이 방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도널드 만줄로(Donald Manzullo) 하원의원이, 동년 10월에는 데이빗 드라이어(David Dreier) 하원의원이 방한하였다. 2013년 8월에는 찰스 랭글(Charles Rangel) 하원의원이 방한하였는데, 랭글 의원은 22선의 다선 의원으로서 6.25 전쟁 참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의회 내 한국문제 연구모임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동 코커스 명예의장을 수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내 친한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초청해 방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미국 의회와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방문 시 가질 수 있는 여러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미국 의회 내에서의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³⁸ <http://www.mofa.go.kr/trade/areaissue/noramercia/business/index.jsp?menu=m_30_30_30&tabmenu=t_7> (검색일: 2013.10.31).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매우 전형적인 대미 통일공공외교 노력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나) 한미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011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한국에서는 김혜진 서기관이 첫 파견 외교관으로 선정되어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듀이 무어(Dewey E. Moore, Jr.) 서기관이 첫 파견 외교관으로 외무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정책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 외교관들의 교환 근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정책합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효율적인 통일공공외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부

한국 공공외교의 주 행위자는 외교부라고 할 수 있지만, 통일관련 외교에 있어서는 통일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내에서 통일관련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통일정책실의 통일기반조성과³⁹와 정책협력과이다.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통일부의 통일공공외교 노력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통일안보주재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안보주재관은 미국(워싱턴),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독일(베를린), 러시아(모스크바)의 5개국에만 파견되어 있다. 통일안보주재관은 외교관

³⁹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696#mydiv14>> (검색일: 2013.10.31).

신분으로 현지 대사관에 배치돼 3년 동안 체류하며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주재국들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한 연구 작업을 병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 통일안보주재관의 활동이 현지에서의 통일부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의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안보주재관 파견을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왔으나 부처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파견대상국 및 인원수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결과 통일안보주재관은 현재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주변4국과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에만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안보주재관의 수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공공외교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결합되어진 공공외교 활동은 통일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안보주재관의 역할은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기대를 받게 된다.

통일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추진계획에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 주변4국 대상 1.5트랙 협의체’ 구축·운영,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⁴⁰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⁴⁰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c=PG0000000691>> (검색일: 2013.10.31). 이와 같은 통일외교의 중시는 지난 수년간의 통일부 전략목표를 검토할 때 반복되어 발견된다. 2010년에는 전략목표의 하나로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하부 성과목표의 하나로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관리과제로 주요국 대상 국제협력 및 홍보, 통일정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전략으로 ‘남북관계 현황, 대북정책 등에 대해 주요국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미·일·중·러·EU 등에서 국제통일전략대회를 개최하며, 외국전문가 초청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현지 통일주재관 주도의 한반도 전문가 연구포럼을 운영하며, 주요국 입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문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계석학 초청 한반도 미래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며, 한반도 미래 협력대회를 창설할 것’ 등을 제시

에는 추동력을 갖춘 중심적 활동인자가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통일안보주 재관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의 사업목표로서 제시되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아직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해외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이 매우 원활해질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민족통일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산에는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해외조직 또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통은 미국의 경우 현재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샌디에고, 애틀랜타, 하와이, 시애틀, 시카고 등에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⁴¹ 이들 미국 내 민주평통 조직들은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통일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이 미국 국민들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때 성공적인 통일공공외교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통은 2013년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 힐레스 도서관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한미 양국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2013년 10월에는 차세대 재미동포들이 모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 비엔나(Vienna)의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2012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8개 중점과제의 하나로 ‘통일외교 적극 추진’을 제시하고, 이행과제로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확보, 주변4국과 고위정책협의회 또는 통일전략대화의 정례화를 개최하여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정책 설명, 『한반도국제포럼』 등 1.5트랙 회의체 운영으로 국제협조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⁴¹ <www.nuac.go.kr/jsp/conference/site/conference_site.jsp?menuid=G0306> (검색일: 2013.10.31).

쉐라톤 프리미어(Sheraton Premiere) 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신뢰와 통합으로 청년이 여는 통일시대’로,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로 1.5세, 2세 재미교포들로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컨퍼런스에서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용사 전우회를 초청, 감사패를 증정하고 특강을 듣는 등 보훈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엔 한반도 전문가와 미국 정치인들도 참여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통일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특히 과거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보면서 미국인 참전용사들이 자신들의 희생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회의의 기초연설을 맡은 수 미테리(Sue Mi Terry) 전 백악관 동아시아 보좌관은 “남북한은 1392년부터 1945년까지 하나의 국가였으며 분단 현실이 비정상임을 안다면 통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통일된 한반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독일을 앞지를 것이란 자료를 제시하며 통일의 경제적 혜택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연설 이후 80명의 청년자문위원들은 분임토의를 거쳐 ‘통일과정에서의 신뢰 구축 방법,’ ‘한미관계 발전 계획’ ‘차세대의 통일 및 한류에 대한 관심 제고,’ ‘북미주 청년자문위원들의 네트워크 및 활동 강화’ 등 해외 청년 자문위원들의 고민들을 발표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을 때 큰 효과를 얻는다는 ‘빗방울 효과’를 역설하여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민주평통의 활동은 미국 내 교포사회에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시금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4) 국방부

국방부 또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랜 기간 동안 UN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1975년부터 2012년까지 29,000여명의 UN 참전용사와 가족이 한국을 다녀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5월에 68명이, 그리고 7월에는 56명의 참전용사가 방한하였다. 이와 같은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참전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공공외교 사업의 한 실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

5) 국회

국회 또한 주요한 통일공공외교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주로 외교통일위원회⁴²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결산과 청원 등의 심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 등)를 행한다. 2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국 의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의원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안분석 등을 통해 정책연구 및 의원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사업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한미 의회청소년교류⁴³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의회가 선발한 대하

⁴² <www.uft.na.go.kr/site> (검색일: 2013.10.31).

⁴³ <www.uft.na.go.kr/site?siteId=site000001025&pageId=page000002488> (검색일: 2013.10.31).

및 대학원생을 상호교환 방문케 하여 양국의 의회, 정치제도, 문화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국 정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시행되고 있다. 1984년 4월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인 이종찬 의원과 봉두완 외무위원장 일행이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중 벤자민 길만(Benjamin A. Gilman) 하원의원(공화당, 당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한미 의회 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84년부터 양국 간 의회차원에서 매년 청소년 교류사업이 실시되었다. 1984년 이래 2010년까지 507명의 대학생이 상호 교환방문하였으며, 금년도는 교류실시 제28차 년도에 속한다. 한국 측에서는 국회의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사무처가 후원하며, 미국 측에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국무부가 후원한다. 방미단과 방한단은 인솔자 1명과 대학생 10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미와 방한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인적 교류 사업은 다른 어떤 공공외교 사업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적교류는 양국의 장기적 우호관계를 향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통일공공외교 노력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행위자들은 1트랙 행위자의 산하기관이나 단체, 관련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행위자들은 정부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공식성을 갖지는 않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에 있어 정부행위자의 강한 영향력 하에

I

II

III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거나 직접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목소리를 대신할만한 행위자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위자 자체의 독창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불어 1.5트랙 행위자가 갖는 반민·반관적 성격은 상대국 행위자들로 하여금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신함에 있어 1트랙 행위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거부감을 갖게 하고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국 공공외교에 있어 대표적인 1.5트랙 행위자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아리랑TV, KBS World Radio,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미 통일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1)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⁴⁵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갖고 1991년 출범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⁴⁴ 이들 1.5트랙 행위자들 중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까닭에, 한국국제협력단은 주로 저개발도상국 가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경우 그 비전으로 국제사회 기여 확대, 문화자산의 가치 확산, 글로벌 소통 강화, 범국민 역량통합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브랜드위원회 역시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비전과 전략 주요 과제 중에 통일에 기여한다는 항목이 없음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가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으로 파악될 수는 있을 것이다.

⁴⁵ <www.kf.or.kr/?menu=33> (검색일: 2013.10.31).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가) 해외 유력·고위인사 초청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외 정계, 사회·문화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위·유력인사 및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청된 해외인사들은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12년 해외인사 초청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57개국 106명이 초청되었는데, 이들 중 미국 인사의 초청 숫자는 총 8명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초청되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한 해 동안 호르헤 도밍게즈(Jorge I. Dominguez) 하버드대학 국제부총장, 알렉로스(Alec J. Ross) 미 국무부혁신담당 수석보좌관, 말콤 로저스(Malcolm Rogers) 미 보스턴 미술관장, 제인 하만(Jane Harman) 미 우드로윌슨 센터 회장(전 민주당 9선 연방하원의원),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미 터프츠대학교 플레처스쿨 학장(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초청되어 방한한 바 있다.

I

II

III

나) 미국 의회 의원 보좌관 초청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및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방한 기간 동안 미 의회 의원 보좌관들은 국회, 정부 정책 입안자, 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을 방문, 안보 및 경제통상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유관인사들과의 면담을 갖는다. 이와 같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한국의 주요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지원 세력을 확보하는 통일공공외교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경제통상과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의회 보좌관 30명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다) 미국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

‘미국평화봉사단(U.S. Peace Corps)’은 개발도상국의 교육·무역·농업·기술의 향상, 위생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모집한 봉사자를 훈련·파견했던 사업으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2,000여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은 영어교육, 공중 보건, 직업 훈련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과거 한국에서 봉사한 미국평화봉사단 단원 및 그 가족을 재방한 초청하여 민간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 관계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방한 봉사단원은 방한기간 중 과거 봉사지를 방문하고 한국 국제협력단 봉사단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한편 교육·보건 분야를

비롯하여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은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61명, 2009년에는 2회로 나뉘어 1차(7.5~11)에 56명, 2차(10.25~31)에 96명, 2010년에는 88명, 2011년에는 1차(7.10~16)에 41명, 2차(10.16~22)에 81명, 2012년에는 84명을 방한 초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인 한국이 그 경제적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지구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평화봉사단원들로 하여금 재방한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분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임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한미 청소년 네트워크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연간 약 200명의 미국 청소년을 방한 초청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방한기간 중 강연, 문화체험,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 한국적 미래세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175명의 미국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I

II

III

마) 서울-워싱턴 포럼

국가별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창구 중의 하나이다. 재단의 여타 국가별 포럼들이 한중미래포럼, 한러포럼과 같이 국가명칭을 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만은 서울-워싱턴 포럼이라는 명칭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워싱턴 포럼은 1994~2003년까지는 ‘한미21세기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다가 2003~2005년에는 ‘한미안보포럼’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이래로 ‘서울-워싱턴 포럼’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의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한국 측 주최자는 세계경제연구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바뀌었고,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국제경제학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로 교체되었다.

바) KF 포럼

KF 포럼은 국내외 저명인사(세계적인 석학, 국제기구 대표,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오피니언 리더 및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세계화 및 세계적 현안 이슈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46차의 KF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45차 KF 포럼에서는 동북아시아 지도자 교체와 북한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KF 포럼은 2008년 출범되었으며,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주 초청대상이었고, 미국 측의 경우 지금까지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전 미국대통령,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국국무장관 등이 초청되어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KF 글로벌 세미나(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KFGS)⁴⁶는 NGO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학자, 공무원, 언론인 등 세계 정책 오피니언

⁴⁶ <<http://www.kf.or.kr/?menu=256>> (검색일: 2013.10.31).

리더들 간 한국 주도의 글로벌 이슈 관련 지식 나눔과 비전 공유 형태의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1년 출범되었다. KFGS는 국내외 각계 저명인사 및 차세대 전문가들이 모여 비핵화,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다문화, 사회적 기업,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2012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한미관계의 세계화,’ ‘다문화 세계의 도전과 공존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주제로 총 3회의 KF 글로벌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총 31개국 137명의 각계 저명인사 및 차세대지도자들이 모여 현안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고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공존·공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KFGS 사업 중 태미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2011년 3월 개최된 제1차 회의 ‘핵확산방지를 위한 비전, 전략, 그리고 제도적 장치’에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6자회담 미국대표 참석, 그리고 2013년 6월 개최된 제4차 회의 ‘한미관계의 세계화’에 버웰 벨(Burwell Bell) 전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리차드 부시(Richard Bush)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시아 센터 소장,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국제사면위원회 워싱턴 사무소장, 윌레스 그렉슨(Wallace Gregson) 국익을 위한 중국태평양센터 선임소장,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등이 참석한 사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 해외정책연구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의 외교, 안보,

I

II

III

통일,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은 해당국 내 우호적 對한국·한반도·동아시아 정책수립과 한국관련 인적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은 또한 각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들과 국제교류단체에 직접적 지원을 행함으로써 친한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총 6개국 21건의 지원을 행한 바 있으며, 이들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건으로 절반이 넘는다(<표 II-1> 참조). 지원된 기관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에 지원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사업은 싱크 탱크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내 정책결정과정을 감안하였을 때 미국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친한적 이미지 형성과 통일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KF의 2012년 미국 내 정책연구소 지원 실적

기관명	프로젝트명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EI	Korean Affairs and Asian-Pacific Issues
Berkeley University APEC Study Center	Linking Trade, Traditional Securit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n Asian Trade Agreements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The Continuing Evolution of the R.O.K.-U.S. Relationship and Korea's Role in Northeast Asia Endowment for a SK-Korea Foundation Chair in Korea Studies

⁴⁷ 지원기관들의 미국 내 영향력에 대해서는 김인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주요 싱크탱크 성향 및 영향력 조사,” (통일부 연구과제 보고서, 2011)을 참조할 것.

기관명	프로젝트명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Nuclear Security University Symposium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CSIS	Endowment for a CSIS Korea Chair (4차년도)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The Day After: North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the DP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Program on U.S.-Korea Polic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Public opinion study "Global Views 2012"
USC Korean Studies Institute(CSIS)	The Korea Project: Planning for the Long Term (3차년도)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Korea Outreach Programs: Cultivating and Engaging the Next Generation of Korea Watchers through Participation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 Across the United States
Korea Society	Policy Series and Art Programs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U.S.-Korea Scholar-Policymaker Nexu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WICS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2)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미국 ‘차세대정치지도자협의회(American Council of Young Political Leaders: ACYPL)’와의 협력 사업으로 1998년부터 한미 양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격년제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이 이를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주의회 의원 및 행정부 정무직의 유망한

I

II

III

차세대 정치지도자들로써 한국 측은 이들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분단 현실과 통일의 현실적 과제 설명을 통해 한반도의 외교적 상황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 한국의 대미정책과 통일을 향한 노정에 있어 우호적 여론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까닭에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사업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국가 간 교육교류 증진 및 해외 지한·친한 인적자원 양성,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발전의 토대마련, 외국인장학생의 유치확대를 통한 국내 대학의 국제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 초청으로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관리하고 있다.⁴⁸ 대표적인 사업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 GKS)으로서 2012년 현재 132개국 4,00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미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명 2.0%에 달한다.

이 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와 같은 장학 사업은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체류 및 교육 기간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친한 인사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와 같은 과거의 도움에 대한 보은의 표시로서 이해될 수

⁴⁸ <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2&menuNo=285> (검색일: 2013.10.31).

있으며, 미국 사회 내에 친한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 또한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

〈표 II-2〉 2012년 9월 1일 현재 정부초청장학생 초청국가 현황: 132개국 4,004명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278	266	217	183	179	120	117	103	102	100	95
6.9%	6.6%	5.4%	4.6%	4.5%	3.0%	2.9%	2.6%	2.5%	2.5%	2.4%
태국	미국	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멕시코	키르기스스탄	터키	기타국	계
95	82	79	71	69	67	59	59	57	1,606	4,004
2.4%	2.0%	2.0%	1.8%	1.7%	1.7%	1.5%	1.5%	1.4%	40.1%	100%

출처: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팀

4) 통일연구원의 국내세미나, 국제세미나 및 해외전문가 초청 라운드 테이블

통일연구원은 그 설립목적을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국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일집현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문제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 및 통일관련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은 통일연구원의 학술활동은 대표적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정책교류협력사업은 주요한 통일공공외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북 통일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적 연구 네트워크 및 국제사회

의 지지확보를 위한 국제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정책현안 중심의 국내(정부, 연구기관, 언론, 학계, 대국민)와 국외(주변국 정부, 관련 싱크 탱크)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미 통일공공외교 활동들로서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나 미국 언론인, 그리고 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수행하는 세미나와 라운드 테이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통일외교포럼, 한반도국제포럼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의 에드워드 동(Edward Dong) 공사참사관, 패트릭 맥이헌(Patrick McEachern) 대외관계 팀장 대행, 준 신(June Shin) 대외관계 팀장 대행, 제레미 톰슨(Jeremy Thompson) 이등서기관 등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켄 가우스(Ken Gause) 미국 해군분석센터(Center for Naval Analysis : CNA)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 등이 통일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통일외교포럼은 지금까지 14회 개최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 6월 11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현황,” 5월 7일 ‘한미동맹의 미래와 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 한미동맹에의 함의(The Future of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Asia: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등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5) 통일교육원의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통일교육원은 1972년 창설되었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 있는 대북관, 건전한 안보관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교육이라는 목표가 직접적 교육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가능하며, 이 다수의

대중에 타국의 대중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한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는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해외의 신진학자를 한국에 초청해 교육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문제와 역사, 문화에 대한 해외신진학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및 동남아 등 7개국의 정부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바 있다. 교육과정 동안 통일비전, 통일정책, 통일외교, 국제협력 등 8개 강좌와 현장학습 및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해외 학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써 장기적 통일과정에서의 우호세력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바, 매우 효과적이고도 가치적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6) 코리아 글로벌 포럼

‘코리아 글로벌 포럼(Korea Global Forum: KGF)’은 한국 주도하에 미·일·중·러·유럽 아시아 국가 등 10여 개국에서 전 현직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협의체이다. 이 포럼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제적 다자협의체를 창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통일부에 의해 지원·창설되었다.

KGF는 한국 주도하에 매년 1회 정도 정례적으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The Korean

I

II

III

Question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라는 주제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KGF 창설을 기념하여 윌리엄 코헨(William Cohen) 전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강연을 한 바 있다.

2011년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Korean Question)’이라는 주제 하에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존 햄리(John J. Hamre)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소장이 기조 강연을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화와 통일 - 한반도 통일문제의 담론화(Peace and Unification - Discussion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으며,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미국 시라큐스대학 맥스웰스쿨 학장(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담당하였다.

KGF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의 대한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초청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GF 도한 1.5트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통일을 위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 2트랙 차원

비정부행위자들의 경우 공공외교의 수신국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발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 강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비정부행위자들에는 시민단체, 학술단체,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의 제시를 통해 2트랙 차원에서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활동들을 파악해 본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의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6.25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 학비 및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2010년 국가보훈처 및 한국전쟁기념재단과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주한 각국 대사관, 현지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첫 장학생으로 미국, 네덜란드,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에서 21명을 선발하여 2011년 4월부터 한국외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한국외대로부터 한국어연수비 및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으며, 입국 후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11개월간의 한국어 연수를 거친 후, 희망하는 학위과정에서 수학하게 된다.

이 사업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우수 해외 인재를 유치하여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갖게 함과 더불어, 그 출신국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분단과 통일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친한적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이러한 사업을 지켜보거나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된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현황과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보은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예로 필자는 2013년 3월 한국외대에서 개최된 한 국제회의⁵⁰에 초대된 학자들을 대상으로

⁴⁹ 이 사업의 수혜자이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Ronald Langeveld (South Africa)와의 인터뷰. 2013년 10월 4일, 10월 11일.

⁵⁰ 2013년 3월 11일에 개최된 주최측 국제학술회의, 『세계화된 세계에서의 스포츠 외교 (Sports Diplomacy in a Globalized World)』 참석자들과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Stephen J. Jackson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Håvard Møkleiv Nygard (University of Oslo, Norway); Sifiso Mxolisi Ndlovu (The South African Democracy

로 이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때 학자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한국의 보은적 자세에 대한 감탄과 공공외교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외교의 강국으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내전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Civil War : CSCW) 소장인 스캇 게이츠(Scott Gates)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외교의 위상을 강화시키며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타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자신의 아버지가 참전용사이기도 한 미국인 게이츠 교수는 노르웨이의 평화를 앞세운 공공외교 노력과 한국의 공공외교 노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공공외교에 통일이라는 목적의식이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2) 건국대학교의 통일인문학 해외 한반도 전문가 초청 연속 강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 공동으로 ‘통일인문학 해외 한반도 전문가 초청 연속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10월 시작된 이 강좌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알렉산드로 만수로프 연구원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대학 이채진 명예교수가 ‘미·중 관계와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12월에는 미국 콜롬비아대 국제관계학과 수 미 테리(Sue Mi Terry) 교수의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남-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 것은 지식의

Education Trust, South Africa); Sayuri Guthrie-Shimizu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Scott G. Gates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Norway).

교의 전형적 형태로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대화와 의견교환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아젠다 설정으로 연결시키는 민간에 의한 통일공공외교의 한 전형적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북한회의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9월 ‘아산 북한회의 2013’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미국 랜드(Rand) 연구소 소속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을 비롯해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중국 칭화대학교 추수룡(Chu Shulong), 일본의 방위정책전문가이자 전 수상 안보고문이었던 야마구치 노보루(Yamaguchi Noboru), 북한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쉐러(Marcus Schiller) 등 40여 명의 북한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능력, 대외관계, 정권의 내구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토론하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진행한 세부 세션의 주제는 ‘북한의 핵, 북한의 핵전략과 대북 억제력,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스마트 제재, 김정은 체제의 현황,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 경제현황, 북한 체제 전망’ 등이었다.

이 회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최가 유지될 경우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화외교 추진실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외교는 문화라는 기제에 치우쳐 온 경향이 있으며⁵¹ 문화외교는 기실 한국 공공외교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여

⁵¹ 김기정,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박철희, 『한국 공공외교의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왔다. 그러나 문화외교가 통일이라는 주제의식과 결합된 경우는 지식외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문화외교 역시 통일공공외교의 중요한 한 하부형태임에 틀림없다. 몇 가지 사례의 제시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 정부 차원

1)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시의 문화외교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대중에게 한국의 문화적 면모의 과시를 통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가장 기억할만한 사건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였던 미국 방문 시 펼쳐졌던 문화외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5월의 방미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함께 과감하고 당당한 스케일로 ‘문화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러 벌의 한복을 준비해 세 번에 걸친 동포 간담회에서 각기 다른 상징과 의미를 갖는 한복을 입고 등장한 대목은 박 대통령 방미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등장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뉴스의 생산과 해설 및 설명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주최했는데, 이 자리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장(場)으로 활용하였다. 스미소니언 미술관 내 야외 뒤뜰에서 개최된 만찬식장에는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스크린 동영상으로 전시되었으며, 한복 천을 활용한 테이블보와 색동웃고름 매듭을 응용한 냅킨 홀더, 전통기와를 활용한 꽃꽂이 등으로 한국미를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두 나라 정치인, 경제인은 물론

을 위한 제언』 참고.

학계 인사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포함, 5백 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스미소니언 미술관에 전시 중인 고 백남준 씨의 작품을 거론하며 “문화가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문화는 한국의 정서 위에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예술의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문화와 평화, 통일을 함께 강조하는 효과적인 공공외교의 방법으로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논리적 이성적 접근만이 아니라 정서적·감성적 측면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지가 미국 사회와 교포 사회에 전달되는 감도(感度)가 달랐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수반을 통한 국가홍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상대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까닭에 박 대통령의 방미활동은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훌륭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교부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공연, 전시, 영화제 등 각종 해외 문화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다.⁵² 이와 같은 문화외교는 지금까지의 한국 공공외교의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³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문화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 중에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⁵² <http://www.mofa.go.kr/trade/cultural/public/index.jsp?mofat=001&menu=m_30_170_100> (검색일: 2013.10.31).

⁵³ <http://www.mofa.go.kr/trade/cultural/events/index.jsp?mofat=001&menu=m_30_170_30> (검색일: 2013.10.31).

2013년 주미공관의 사업들 중에서는 미국 LA 포드극장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연이 대표적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LA의 포드극장에서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연이 개최되었고, 이 공연에는 캘리포니아 상·하원의원 및 정·관계 인사, 외교 단과 미 육군 40사단 현역군인과 한국전 참전용사,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문화예술계 인사, 전 평화봉사단원 및 LA시민 등 약 1,2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바 있다. 이러한 공연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장기적이며 우호적인 관계 조성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 교민들이 진출해 있고, 한국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공연들이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관계는 많은 미국 도시들에서 ‘한국의 날 축제(Korean Festival)’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진전 개최와 한미 친선문화의 밤과 같은 행사들은 한국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미국인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통일공공외교의 성공적 사례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테마형 문화외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테마형 문화외교 사업은 특정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문화외교 활동을 말한다.⁵⁴ 2008년 빈곤, 2009년 기후변화, 2010년에는 녹색성장이 테마로 선정되어 이를 주제로 한 공연 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외교부의 이와 같은 테마형 문화사업의 주제를 통일로 선정한다면, 지금

⁵⁴ <http://www.mofa.go.kr/trade/cultural/themed/index.jsp?mofat=001&menu=m_30_170_70> (검색일: 2013.10.31).

까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서 이루었던 성과만큼이나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한 행위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단체로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특별히 통일을 테마로 삼고 있는 활동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모든 공공외교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여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통일공공외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통하여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통일과 관련한 항목은 문화국가 만들기의 하부 분야인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 목표는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인 바, 이를 위해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통일문화자료센터 설치(2014년~), 남북 간 분야별 호혜적 문화교류·협력 재개 및 정례화,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실천 목표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매우 적극적 공공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주제와 결합된 경우를 찾기 힘들며,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라고 부를 만한 사례들을 찾기 힘들다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⁵⁵ <http://www.mcst.go.kr/web/introCourt/roll/vision/powerKorea2013_1_3.jsp> (검색일: 2013.10.31).

(나) 1.5트랙 차원

1)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⁵⁶ 세종학당의 목적은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류 활성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산 등이다. 2012년 9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개소의 세종학당과 40개소의 세종교실이 설치되어 있다.⁵⁷

미국의 세종학당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에 위치해 있다. 세종학당의 주요 임무가 한국어 전파에 있는 만큼 통일을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일공공외교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문화원

미국 내 문화외교의 주된 담당자는 ‘한국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미국에는 현재 워싱턴과 뉴욕, L.A. 세 곳에 한국 문화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미 공공외교의 첨병이자 브랜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문화원은 미 현지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 세계 한류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공연·전시·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전시, 영화제, K-pop 이벤트,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 세종학당 운영, KORUS 포럼 운영, 태권도 전파

⁵⁶ <http://www.sejonghakdang.org/nuri/sjc/SJC_Main> (검색일: 2013.10.31).

⁵⁷ <http://www.sejonghakdang.org/nuri/sjs/form/SJS_AboutUs> (검색일: 2013.10.31).

⁵⁸ <www.mcst.go.kr/usr/culture/index.jsp> (검색일: 2013.10.31).

등이 있다. 문화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큰 차이는 없으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원의 노력이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목표의식과 전체적인 문화외교 프로그램과의 조화를 통한 의식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스포츠 외교 추진 실태

스포츠 외교 또한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활동 및 태권도 교류협력사업,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⁵⁹

특히 태권도 교류협력과 해외확산은 훌륭한 공공외교 수단이 되고 있는 바, 세계 190여 개국 7,000만 명의 수련인구를 가진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협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태권도 시범단 공연, 태권도 사범 및 태권도 봉사단원 파견, 태권도 용품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공관에서는 각국의 태권도협회와 함께 태권도대회 개최, 태권도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태권도 및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1년에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2년의 경우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2013년의 경우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태권도 시범단이 파견되어 활동한 바 있다. 2012년에는 L.A. 다저스의 코리안 데이(Korean Day) 시범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⁶⁰

또한 미국 태권도 협회(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 ATA)와의 협력 활동 및 인사교류는 미국 내에서의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외교의

⁵⁹ <http://www.mofa.go.kr/trade/cultural/gym/index.jsp?mofat=001&menu=m_30_170_60> (검색일: 2013.10.31).

⁶⁰ <www.kukkiwon.or.kr/front/pr/profile.action> (검색일: 2013.10.31).

효과를 더욱 배가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교류 활동 또한 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기원은 기존 해외주재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사업’과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단 파견 사업’을 접목해 해외 태권도 시범단을 지원,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태권도 시범은 문화외교의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활용성은 증대된 반면, 정작 해외에 파견되는 시범단의 활동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등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기원은 시범단 육성을 요청하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시범단을 파견,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 시범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범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요청국가에 한해 시범 후 교육 팀을 현지 잔류시켜 매뉴얼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꾀함은 물론 교육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국기원 시범단과의 합동 시범 공연을 통해 문화외교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공공외교적 발신의 노력과 수신국의 노력을 결합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지며, 많은 태권도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시범단의 공연테마를 통일과 결합할 경우,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국에서 활약했거나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야구와 골프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훌륭한 공공외교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을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 지원을 실시

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통일공공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역에서 은퇴한 스포츠 스타의 경우 스포츠 외교관, 혹은 통일공공외교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미디어외교 추진실태

통일공공외교적 측면에서 미디어외교의 주된 추진자로는 아리랑 TV와 KBS World Radio를 대표적인 행위자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아리랑TV

아리랑TV는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이해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국내 방송사업,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해외매체를 통한 우리 방송물의 방송 지원 사업, 해외방송사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정부 및 공공기관 해외광고 대행사업 등이 있다.⁶¹

아리랑TV는 위성 및 인터넷 방송과 함께 미국의 경우 DTV(Digital Terrestrial TV Service) 서비스를 통하여 2009년 6월 LA를 시작으로 미국 주요도시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등이 가시청지역이며, 한국의 문화와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⁶¹ <<http://www.arirang.co.kr/index.asp>> (검색일: 2013.10.31).

아리랑TV는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Arirang-KF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출범시켜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⁶² 이 포럼은 국제적 이슈인 문명 간의 이해, 개발협력, 인간안보 등을 다루는 데 있어 글로벌 미디어의 역할이 자국 외교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제적 ‘공공재(Public Goods)’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리랑TV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동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미디어 간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 공동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제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창립 목표를 밝히고 있다. 2013년 2월에는 ‘국제사회의 격차해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Bridging the Divide)’이라는 제하의 첫 번째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이 포럼은 장기적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미디어외교의 주요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아리랑TV와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KBS World Radio

KBS World Radio⁶³는 11개 언어로 방송하는 국내 유일의 다국어 국제 방송 채널이다. 1953년 8월 15일 ‘자유 대한의 소리(Voice of Free Korea)’의 이름으로 매일 15분 영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일본어, 우리말,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독일어, 베트남어로 언어를 확대하여 방송하고 있다.

1973년 4월 ‘라디오 한국(Radio Korea)’으로 개칭하고, 1994년 8월 ‘Radio Korea International(RKI)’로 이름을 바꾼 후, 2005년 3월 ‘KBS

⁶² <<http://www.kf.or.kr/?menuno=658>> (검색일: 2013.10.31).

⁶³ <<http://world.kbs.co.kr/korean/>> (검색일: 2013.10.31).

World Radio'로 영문 명칭을 변경하였다.

KBS World Radio는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문화를 전 세계 청취자와 네티즌에게 소개함으로써 국제 친선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00만 재외동포와 고국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BS World Radio의 북미지역 방송시간과 주파수, 기본 편성표는 아래 <표 II-3>과 같다.⁶⁴ 편성표의 구성내용을 보았을 때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한국! 오늘과 내일' 등이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오늘과 내일'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면서 해외 동포들에게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제작되고 있는 까닭에 미디어를 통한 통일공공외교의 작동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 까닭에 한국에 관한 최신 뉴스와 경향을 전하는데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의 통일과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실태 전달도 적절히 편성된다면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의 창구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3> KBS World Radio 북미지역 방송시간, 주파수 및 기본 편성표

북미

언어	방송시간 (UTC)	주파수 (kHz)
우리말 2	14:00 ~ 15:00	15575
영어 1	13:00 ~ 14:00	15575
스페인어	02:00 ~ 03:00	15575

⁶⁴ <http://www.world.kbs.co.kr/korean/about/about_schedule.htm> (검색일: 2013.10.31).

우리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0-17	KBS WORLD Radio 뉴스							00-10
17-42	시사충전, 여기는 서울입니다					싱싱 라이프	유영석의 음악여행	10-60
42-45	-라디오 시사고전-							
45-60	경제 인사이드	트렌드 코리아	얼썬! 우리가락	한국 오늘과 내일	스포츠 스포츠			

영어 방송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0-15	뉴스 와이드					뉴스	주간 핫이슈	00-10
15-45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어 강좌-				시사 포커스	Touch Base in Seoul	Korean Pop Interactive	10-25
45-60	경제 인사이드	트렌드 코리아	얼썬! 우리가락	한국 오늘과 내일		KBS Listeners' Lounge		25-40
								40-60

(다) 통일부

통일부는 인터넷 통일방송⁶⁵을 통해 Uni TV와 Uni Radio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방송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Uni News, Uni 기획, 공중파링크, 교육원영상, 브리핑룸, 기타영상 등이 있다.⁶⁶ 이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방송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제작이 온전히 한국어로만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타국의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⁶⁵ <<http://unitv.unikorea.go.kr/web/>> (검색일: 2013.10.31).

⁶⁶ <http://unitv.unikorea.go.kr/web/html/unitv_tv.html> (검색일: 2013.10.31).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통일안보주재관 등으로 하여금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통일공공의 교로서 활용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또한 SNS(페이스북, 트위터, me2DAY, 요즘)를 통한 소통에도 힘쓰고 있지만, 이 또한 한국말로만 운용되고 있는 까닭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아리랑TV나 KBS World Radio와의 협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

직접적인 미디어 외교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넓은 의미의 미디어 외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관하고 있는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은 ‘베델 펠로우십’이라는 명칭 하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초청 대상자를 해외 유력 매체 언론인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전문분야 기자, 저널리즘 전공 차세대 언론인, 교포 2·3세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과 전문분야의 주요 언론인들을 향한 초청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해당국가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초청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세분되는데, 주요 국제행사와 수교 기념행사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계기별 초청(1주 이내, 30인)⁶⁷, 방한 언론인이 자유 취재 형식으로 활동한 뒤 현지어로 된 한국 관련 책자나 영상자료들을 제작·배포할 수 있게 하는 심층 취재 초청(5주 이내, 10인), 장차 차세대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될 선진국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위한 방한연수(3~4주, 20인), 해외교포 2·3세 언론인들과의 유대 및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한국계

⁶⁷ 이 사업은 주요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해외 유력언론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관련한 긍정적 보도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예로서 한미동맹 60주년 계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계기,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계기 등과 같은 사건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언론인 초청(1주, 15인), G20 한국개최 관련 회원국 언론인 초청(1주, 50인),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언론인 초청(2~3주, 30인)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초청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 후 초청 언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 제공 및 정보 교환 등 사후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방한 인사들의 현지 활동 상황 또한 주요 외신매체 및 각 재외공관을 통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론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도 영향력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타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대미 통일공공외교라는 점에 집중했을 때 미국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한국의 통일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되는 활동들은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대표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활동들을 검토한다.

(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이루어진 해외 순방에서 (한국전 참전국의 경우)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방문국의 무명용사묘를 찾아 헌화하는 행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이 상대국을 존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평화 애호적이며 아직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상대국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6·25 전쟁에 대해 이해하게 함으로써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우호세력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공공외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의 미국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했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기시켰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미 통일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파악된다.

(나) 한미우호협회

한미우호협회는 1991년 6월 26일 창설된 단체로서 비영리, 비당파적인 민간조직으로서 한미 간의 각종 연구와 문화의 이해, 친선활동과 교류의 증진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함을 설립목표로서 밝히고 있다.⁶⁸ 한미우호협회는 한미동맹강화 및 우호증진의 중요성을 국내 및 미국에 알리고 양국정부에 전달 및 촉구하는 각종 활동, 한미동맹강화 및 우호증진 여론 형성주도 활동, 한미 간의 문화 및 학술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 강연회, 출판물의 발간 등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한 공공외교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한국의 학계, 경제계, 사회문화계, 국가안보 분야 등에 있어서의 여론주도층 및 주한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우호의 밤, 한미우호상 수여, 한미친선음악회, 협회지 ‘영원한 친구들’ 발간, 월례포럼을 통한 한미우호강화학술사업, 조찬포럼, 국제안보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2002년부터 매년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되고 있는 한미우호상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우호상 수상자들 중에는 현홍주 전 주미대사, 구평희 E1 명예회장, 월터 샤프(Walter L. Sharp)

⁶⁸ <<http://kafs.or.kr/>> (검색일: 2013.10.31).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릴리(James Roderick Lilley)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의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한국의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통일공공외교적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의 제안으로 미국의 저명인사들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개인 및 기업회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한미 양국의 정책, 기업, 경제, 교육, 예술, 그리고 영화에 관해 전문성 있고 편견 없는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며,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⁶⁹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현재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의 경우 미국인들이 주가 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주요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도 영향력 있는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신국이 아닌 수신국의 국민들이 발신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주가 되는 경우으로써 발신국의 공공외교 노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수신국 국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공공외교 형태로 간주된다.

⁶⁹ <<http://www.koreasociety.org/>> (검색일: 2013.10.31).

코리아소사이어티의 경우 한국전쟁의 영웅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창설의 주동자이며, 이후의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사회 내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기업과 정책, 인사교류, 교육자료제공, 장학금지급, 한국어 교육, 미국 내 초·중·고등학교 순회를 통한 한국문화 전파, 예술작품 전시, 영화상영, 공연예술 실행, 요리소개, 한국관련 저서 집필, 한국과 미국의 젊은 지도층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으며, 그 활동영역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창설자인 밴 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밴 플리트 상’을 수여해오고 있는 바, 이는 한미관계 증진에 공헌한 한국인 혹은 미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2012년에는 로버트 벤모쉬(Robert H. Benmosche)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역대 수상자들 중에는 한국 측 인사로는 고 김대중 대통령,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있으며, 미국 측 인사로는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전 미국대통령, 콜린 파월(Colin L. Powell) 전 미국무부장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국무부장관, 언론인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프리맨 재단의 휴톤과 도린 프리맨 부부(Houghton and Doreen Freema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요 후원자들에는 현대, 삼성, 엘지, 포스코, 동양그룹, 팬택, 한화, SK, GS Caltex,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한국의 영향력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총 망라되어 있으며, 이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에서 갖는 위상과 기대되는 역할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시민참여센터

통일공공외교의 또 다른 행위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모임인 시민참여센터(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⁷⁰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 뉴욕시에서 한인유권자센터(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비정파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특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육성 및 교육하고, 한인 사회와 모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상호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의 이익 증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한국이나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를 방문하도록 노력, 한국이나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소식을 미국사회에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미국 내에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는 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중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의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Kupferberg Holocaust Center)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동북아시아 역사,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공부하고, 인터뷰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사료로 남기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당시 발생하였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 공유와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진행되며, 반일본 정서를

⁷⁰ <<http://kace.org/>> (검색일: 2013.10.31).

부추기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이와 같은 활동은 미국 사회 내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로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들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책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호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기업

기업의 경우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현대자동차가 벌이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 프로그램과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의 음주운전 방지행사 지원, 유색인종인권단체인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와 미국 의회의 히스패닉코커스 연구소(Congress established the 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Institute: CHCI)에 대한 후원을 통한 인종의 다양성 후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활동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그 동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의 상승 및 이에 근거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6)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실태: 북핵문제 협력 유도

본 절의 시작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공공외교는 한국의 안보여건을 개선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과 평화노력 및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이 제시하는 평화통일방안, 북핵문제 해결책이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군축노력 등을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담론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표준으로 선택되도록 하는⁷¹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공공외교와 더불어 본 항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직·간접적 노력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주된 행위자가 정부행위자, 그중에서도 외교부가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⁷² 외교부의 주요정책목표와 이슈별 자료실을 검토했을 때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외교부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은 분명하며, 외교부는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⁷³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들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로 북핵외교기획단장실(북핵협상과, 북핵정책과)과 평화외교기획단장실(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이 설치되어 있다.⁷⁴ 이들 부서야말로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북핵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는 정책활

⁷¹ 이근,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서울: 미래전략연구원, 2011), p. 17.

⁷² 본 책 pp. 55~58 참고.

⁷³ <http://www.mofa.go.kr/trade/hanbando/index.jsp?mofat=001&menu=m_30_20> (검색일: 2013.10.31).

⁷⁴ <http://www.mofa.go.kr/introduce/organized/depart/20110921/1_25480.jsp?menu=m_70_40_10> (검색일: 2013.10.31).

동들과 군비와 핵이라는 넓은 의미의 북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활동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직·간접적 활동들 모두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 노력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가)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은 2012년 3월 26~27일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4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핵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국들은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정상성명’과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공식 결과문서로서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였으며, 서울 코뮤니케는 ‘핵물질(HEU, 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을 담고 있다.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은 여기 참여하여 서울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행현황 점검을 주도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를 위한 지구촌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평화·안보분야에서 한국

의 총체적 국가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기실 핵안보정상회의의 시작이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프라하 선언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상회의에 갖는 미국의 관심과 노력을 익히 예측할 수 있다.

국제회의의 개최는 타국의 대중과 세계인들에게 개최국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한국은 출범과 그 진행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대중을 비롯한 세계인의 관심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한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핵비확산조약

국제사회는 WMD 확산 위협 증대에 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 2010 NPT 평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00년 평가회의 이후 10년 만에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포함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한국은 2010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채택된 최종 결과문서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동시에,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결의에 따른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였다. 미국이 NPT의 주도적 역할담당자 중 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NPT에의 적극적 참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앞서 지식외교 파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미나와 포럼외교,

인사교류 등을 통해 미국 대중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모든 행위들이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가 인식조사

본 연구과제에서는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체계와 추진실태와 함께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한다. 본 조사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주는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외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설계를 설명하고 그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문항 작성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특징

(가) 문항의 구성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미국은 한국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이다. 한국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다.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는 별로 다르지 않다. 즉,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한국의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설문은 아래와 같이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적 분석,’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미국의 특성에 따른 분석’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별 문항 구성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II

III

1)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적 분석

다른 조사 대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미 공공외교의 일반적 분석에 관한 설문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공공외교에 관한 일반적 이해에 관한 문항들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공공외교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둘째, 한국의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셋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넷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다섯째,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수단별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과 주요 대상 지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대한 문항이 있다.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 혼합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등 공공외교의 전 주체들을 망라하여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공공외교의 프로그램에서는 언론 대상 프로그램, 학계 및 정책연구 씨클 대상 프로그램,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요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서는 문화·예술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스포츠자산, 경제자산 등 다양한 유형을 자산들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2)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두 번째 파트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설문이다. ‘통일공공외교’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을 일컫는다. 이 파트에서는 첫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둘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접하게 된 매체, 셋째, 통일공공외교의 미국 국민

들의 인식전환에의 기여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이어서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대상과 장애요인, 그리고 향후의 통일공공외교의 중점과제 등을 질문하였다. 그 후 더욱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한반도 통일의 형태에 대한 질문도 역시 포함되었다. 첫 번째 파트와 유사하게,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과 핵심적인 담당기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으며 통일공공외교의 국가별 효율성을 포함하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의 통일공공외교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중점과제는 첫째,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둘째, 동아시아 경제발전,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넷째, 북한의 변화 유도 중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서는 첫째, 북한의 민주화,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 넷째, 북한의 비핵화 중에서 역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지난 정부에서의 통일공공외교의 평가 문항들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공외교를 평가하고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세 번째 파트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아홉 개의 문항들을 담고 있다. 통일관련 공공외교란 직접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 핵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일에 관련된 주변국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외교를 일컫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 파트에서는 북한 핵 관련 문항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북핵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그리고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어서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과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끝으로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에 관한 문항이 있다.

4) 미국의 특성에 따른 세부문항

마지막 파트는 미국의 특성에 맞춘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문항들이다. 이 파트에서는 첫째,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이 문항에서는 첫째, 미국의 동북아 지역 시장 보호와 확대, 둘째,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 경감, 셋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인권 가치의 확산, 넷째, 북핵문제의 해결에 따른 비확산/반확산정책의 동력 확보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 문항의 내용과 특징

이상과 같이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은 문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이론과 정책의 연결성

첫째, 많은 문항들이 공공외교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작성되었다. 공공외교의 체계, 공공외교의 주체, 공공외교의 수단과 목적 등을 묻는 문항들은

공공외교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제시된 것들이다.⁷⁵ 21세기의 신 공공외교는 정부와 민간주체의 공동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주도인지, 민간 주도인지, 혹은 민·관 합동의 공공외교인지에 따라서 공공외교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외교의 주체는 여러 정부부처 이외에 국회, 기업, 민간외교단체, 개인 등 여러 수준의 주체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공공외교의 수단 혹은 자산에 있어서도 문화·예술, 스포츠, 학술·인적 교류, 미디어 외교 등 다양한 종류의 수단 혹은 자산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공공외교 연구에서 다루는 필수적인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것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2) 한미관계의 특수성

본 조사는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특별히 감안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혹은 미국 국민들의 한반도 문제 혹은 통일에 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외교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제4부는 미국의 특성에 따른 세부문항만으로 구성되어 미국인들의 한반도 문제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등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⁷⁵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II)』,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3~62.



유지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한반도 통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3) 북핵문제의 중요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미국의 특징적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관계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제3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는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전반적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하여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2) 전문가 선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전문가 선정의 고려 요소

설문 대상 전문가의 선정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문제들과 국내의 미국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분석 결과의 왜곡을 가져오는 폐해를 방지하고 두 그룹 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미국 전문가의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정했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소속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고 추가적으로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일하는 인사들도 고려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는 평판도도 고려하였다.

국내 전문가의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미국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유수의 외교정책 전문 연구소 소속의 전문가들의 일차적으로 고려하였고 학계 인사들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나) 조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

미국 전문가들의 소속기관은 크게 싱크탱크, NGO, 그리고 대학교와 그 부속연구소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싱크탱크를 보면, AEI,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RS, CSI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ritage Foundation, IDA, Hudson Institu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SS, KEIA,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RAND, Stimson Center, US-Korea Institute at SAIS 등이 있다. NGO 그룹에는 Amnesty International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교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IT, Georgetown University 등의 학교와 그 부속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소속기관 중에는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대학교의 교수들이 포함되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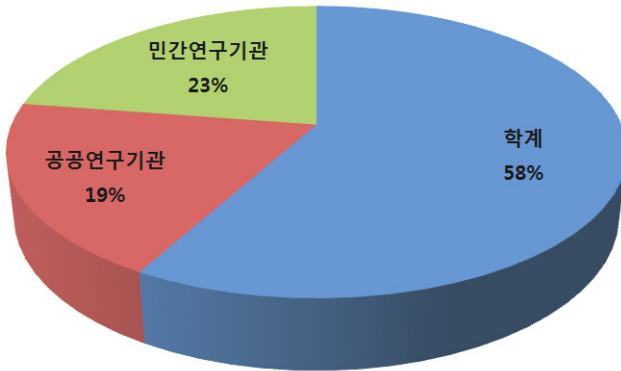
III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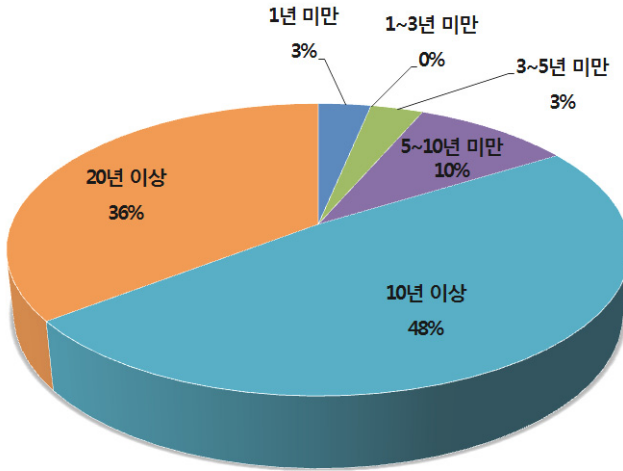
(1) 미국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설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기 위한 영어 번역본 역시 검토와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설문지는 26명의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35명의 국내의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3건의 답변이 회신되어 총 5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학계 소속이 58%로 가장 많았고 민간연구기관 소속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소속은 1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업무경력으로 보면 한반도 통일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년 이상 경력자가 36%로 그 뒤를 이었다. '5~10년'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0%였으며, 나머지는 '3~5년'과 '1년 미만'이 각각 3%를 차지하였다.

〈그림 II-1〉 소속 기관



〈그림 II-2〉 업무 경력



(가) 한국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분석

1)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행위자

본 연구팀이 정의하는 공공외교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1.9%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38.7%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반응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은 1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많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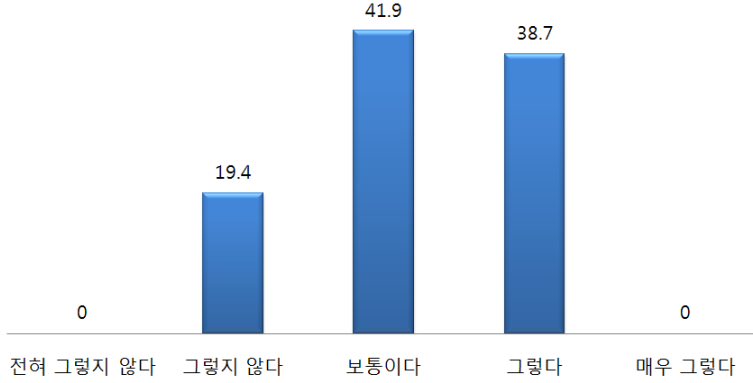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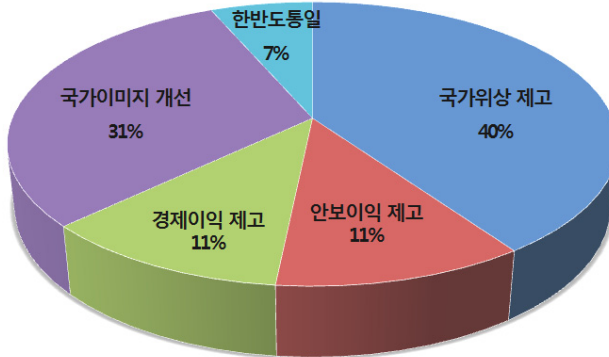
III

〈그림 II-3〉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단위: %)



〈그림 II-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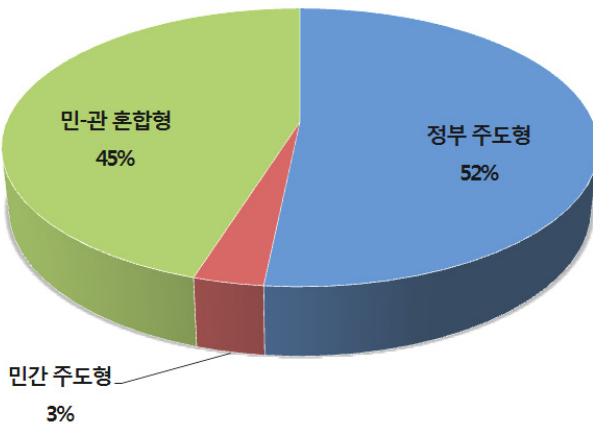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 위상 제고,’ ‘안보 이익 제고,’ ‘경제 이익 제고,’ ‘국가 이미지 개선,’ ‘한반도 통일’이라는 5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토록 한 결과, ‘국가 위상 제고’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31%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응답이 이었으며, ‘안보 이익 제고’와 ‘경제 이익 제고’가 각각 11%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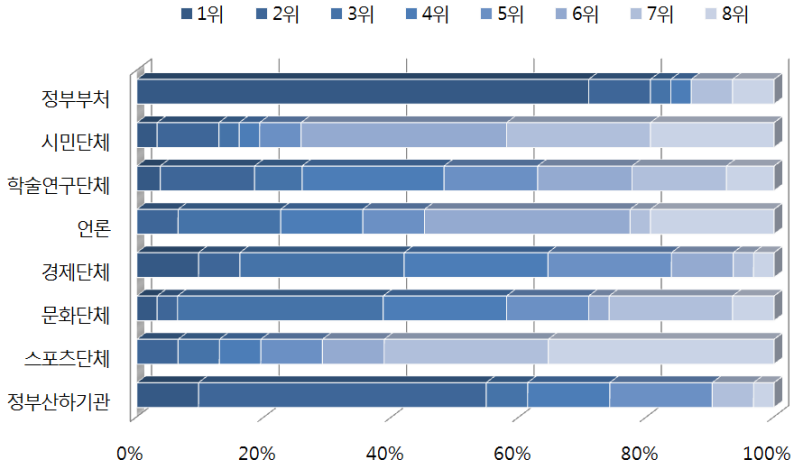
통일'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7%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의 경우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52%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45%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5〉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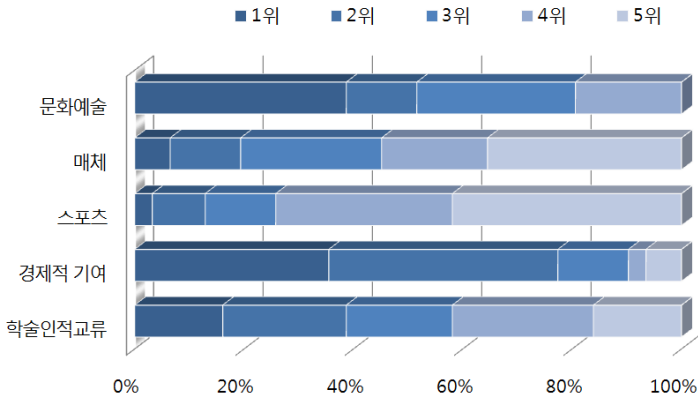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한국의 공공외교의 주요 체계에 이어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으로 이루어진 8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8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경제단체,’ 4위는 ‘문화단체’에게 돌아갔으며, ‘학술연구단체’가 5위, ‘언론’이 6위, ‘시민단체’가 7위로 나타났다. ‘스포츠단체’는 가장 낮은 8위로 나타났다. 역시 공공외교 추진체계에 이어서 정부가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역시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수단, 프로그램, 대상 지역, 그리고 정책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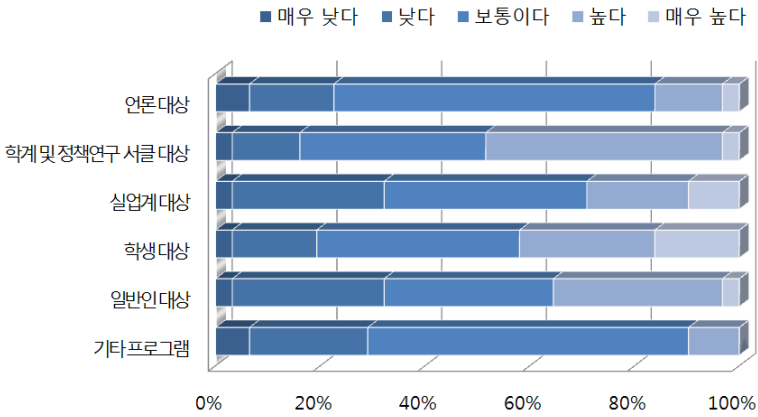
〈그림 II-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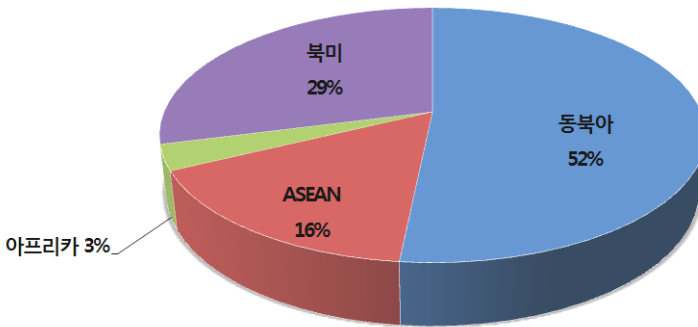
한국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학술·인적교류로 이루어진 5개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기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문화·예술,’ 3위는 ‘학술·인적 교류,’ 4위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는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했다. 이를 주요 행위자에 관한 인식과 연결하면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기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프로그램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이 이었으며, 3위는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 4위는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5위는 ‘언론 대상 프로그램’이었으며, 6위는 ‘기타 프로그램’에게 돌아갔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비정치적인 사안이며 상대적으로 쉽게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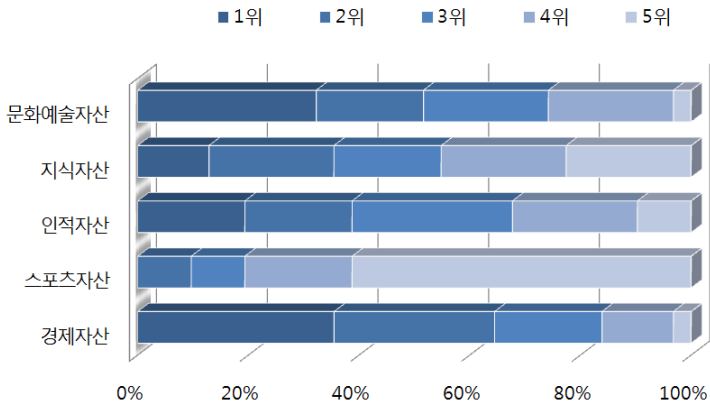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에 관해서는 ‘동북아’라는 응답이 52%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북미’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 ‘ASEAN’이라는 응답은 16%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가 가장 낮은 비율인 3%를 기록했다. 역시 한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에 공공외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경제자산,’ ‘문화예술 자산,’ ‘인적 자산,’ ‘지식 자산,’ 그리고 ‘스포츠 자산’의 순으로 중요도를

꼽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제적 자산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자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들은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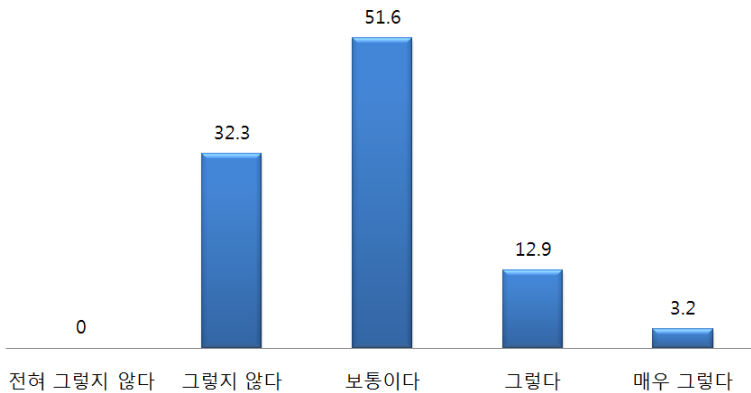


(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1)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전반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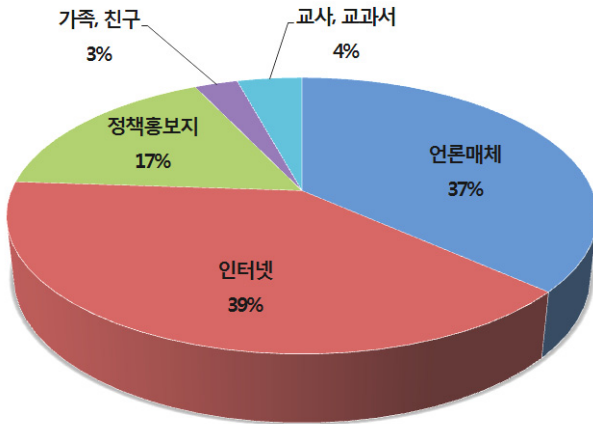
〈그림 II-11〉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단위: %)



가장 먼저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평가를 조하하였다. 본 연구팀이 정의하는 통일공공외교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가 32.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렇다’가 12.9%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대체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12〉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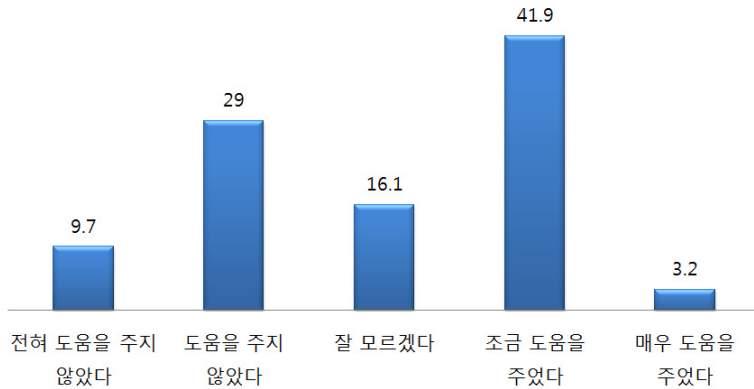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하게 된 경로에 관해서는 언론매체, 인터넷, 정책홍보지, 가족/친구, 교사/교과서로 이루어진 5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하여 접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토록 한 결과, ‘인터넷’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언론매체’가 3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책

홍보지'는 17%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로 '교사/교과서'가 4%, '가족/친구'가 3%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금 도움을 주었다'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29%로 그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6.1%였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9.7%를 기록하였으며, '매우 도움을 주었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II-13) 미국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도움

(단위: %)



위 질문에 대한 후속질문으로 미국 국민들에 대하여 한반도 인식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 '북한 핵 위협,'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이 중 무엇을 이해하는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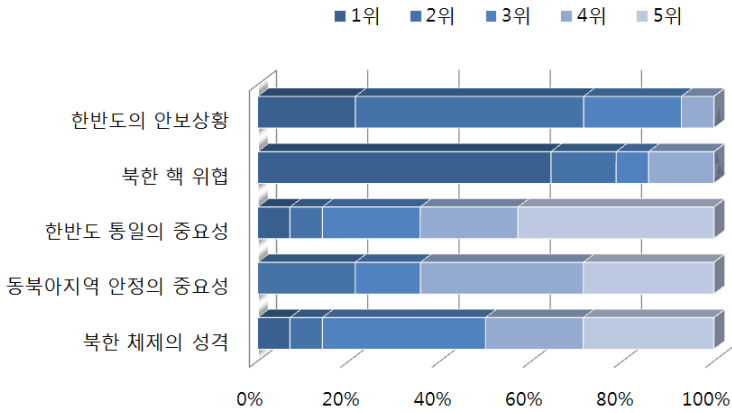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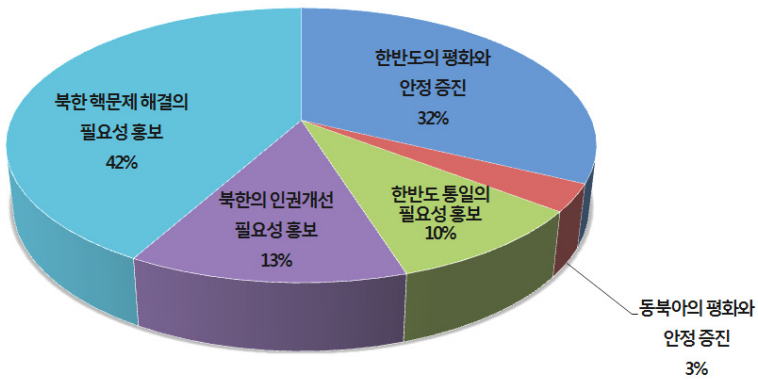
III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14〉 미국 국민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그림 II-15〉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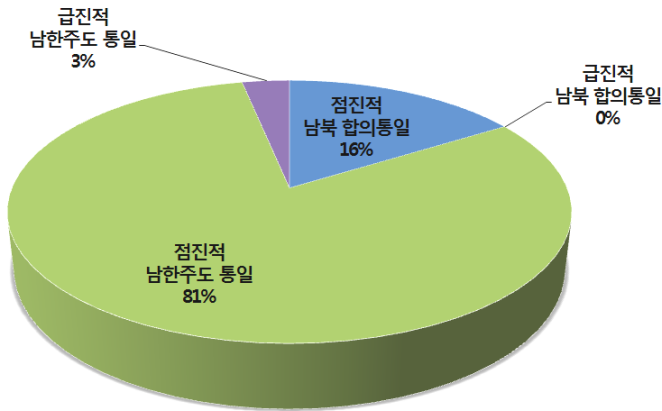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가 42%로 가장 많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응답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는 13%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는 10%로 나타났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은 가장 낮은 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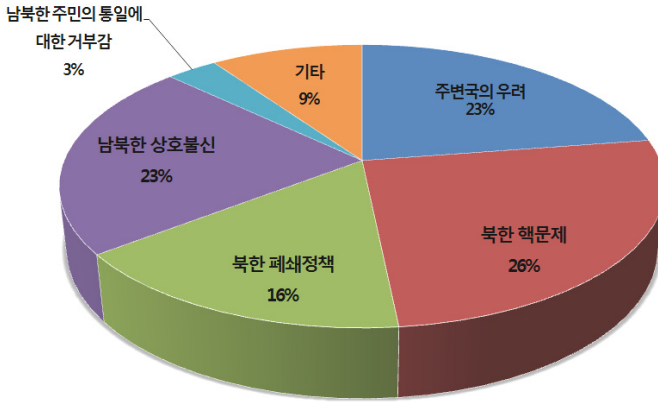
2) 한반도 통일 형태, 통일공공외교 장애요인 및 주요 분야

〈그림 II-16〉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점진적 남한주도 통일'이라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16%로 나타났으며, '급진적 남한주도 통일'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의 비율로 나타났다. 점진적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으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남북 합의통일보다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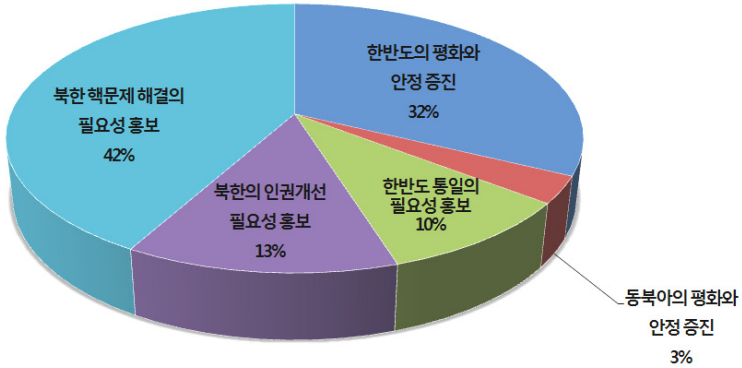
〈그림 11-17〉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다음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 문제’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주변국의 우려’와 ‘남북한 상호 불신’이 각각 23%의 비율로 나타났다. ‘북한 폐쇄정책’이라는 응답은 16%로 나타났고, ‘기타’가 9%를 차지하였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가장 낮은 3%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응답을 보여줌으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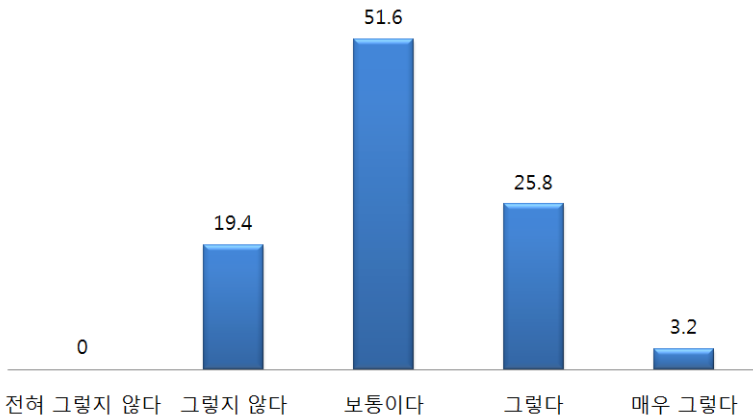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가 42%로 가장 많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응답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는 13%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는 10%로 나타났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은 가장 낮은 3%를 기록했다. 미국에게는 역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8〉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국민 인식

(단위: %)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라는 응답이 25.8%로 그 뒤를 따랐다. 19.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그리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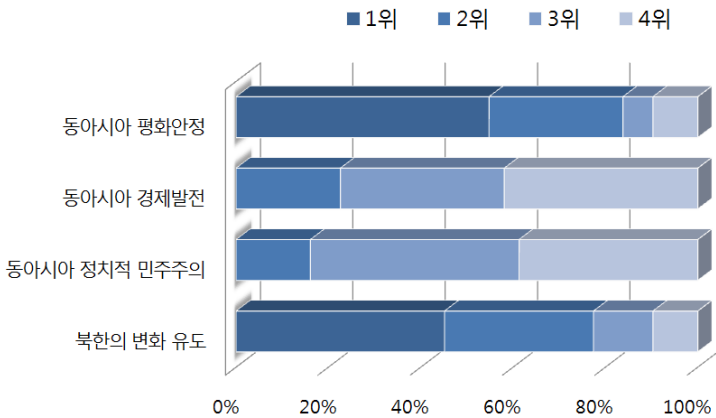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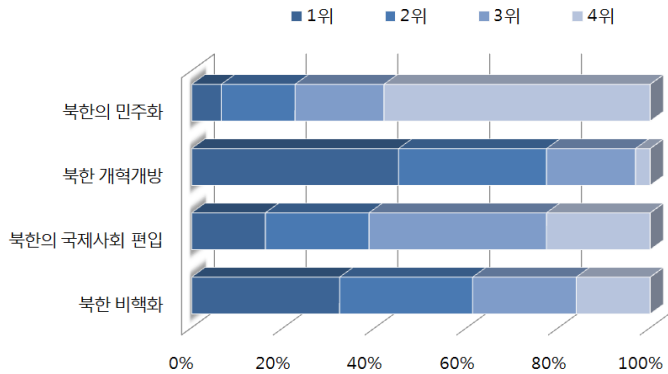
로 볼 때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의 한국의 통일의 필요성의 인식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동아시아 평화·안정,’ ‘동아시아 경제 발전,’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북한의 변화 유도’로 이루어진 4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이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4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동아시아 평화·안정’이었다. 2위는 ‘북한의 변화 유도,’ 3위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이었으며, 4위는 ‘동아시아 정치적 민주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통일이 북한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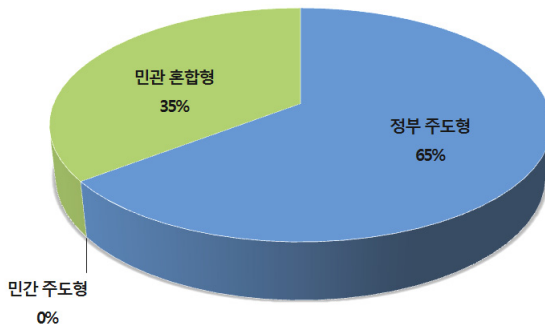
〈그림 II-21〉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공공외교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 ‘북한의 비핵화’라는 4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북한 비핵화,’ 3위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었으며, ‘북한의 민주화’는 4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 추진 주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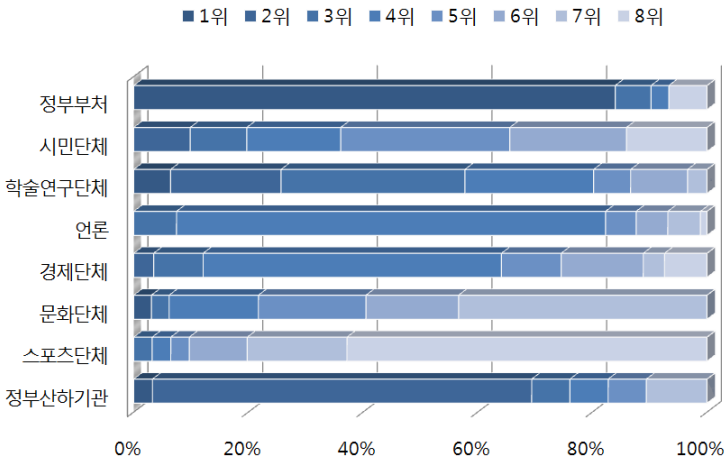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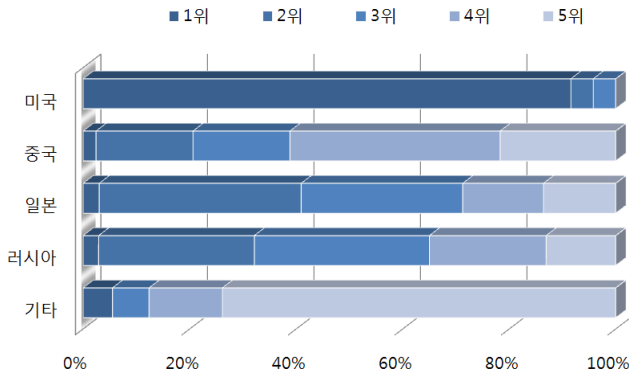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의 특징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6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5%는 ‘민·관 혼합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공공외교 역시 공공외교 일반과 마찬가지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 문항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핵심주체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으로 이루어진 8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학술연구단체,’ 4위는 ‘시민단체’였으며, ‘스포츠단체’가 가장 낮은 8위를 기록했다. 정부주도의 통일공공외교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23〉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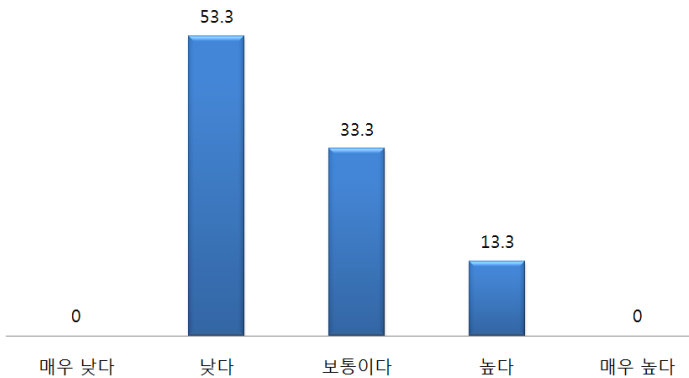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로 이루어진 5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긍정적 태도의 강도에 기초하여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일본,’ 3위는 ‘러시아,’ 4위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호의적이며 중국이 가장 비호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림 II-25〉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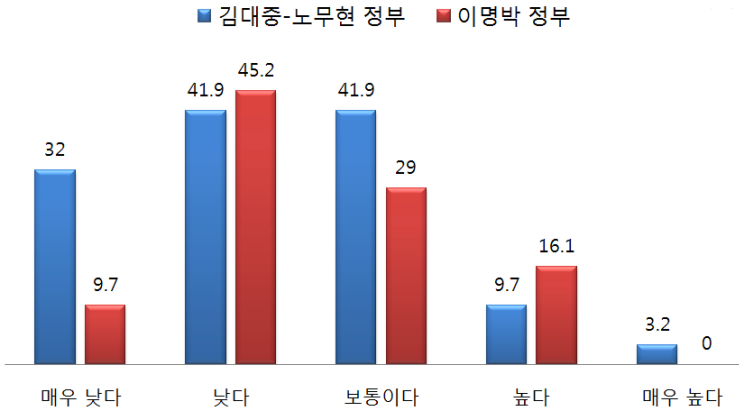


I
II
III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한 후, 해당점수에 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낮다’가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높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13.3%의 수치를 보였다.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평가와 유사하게 통일공공외교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림 II-26〉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단위: %)



위의 질문의 연장선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시 후, 정부별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토록 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낮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41.9%씩을 기록하였으며, ‘매우 낮다’가 32%로 그 뒤를 이었고, ‘높다’라는 응답은 9.7%의 비율로, ‘매우 높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2%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낮다’가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보통이다’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 ‘높다’라는 응답은 16.1%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낮다’라는 응답은 9.7%로 가장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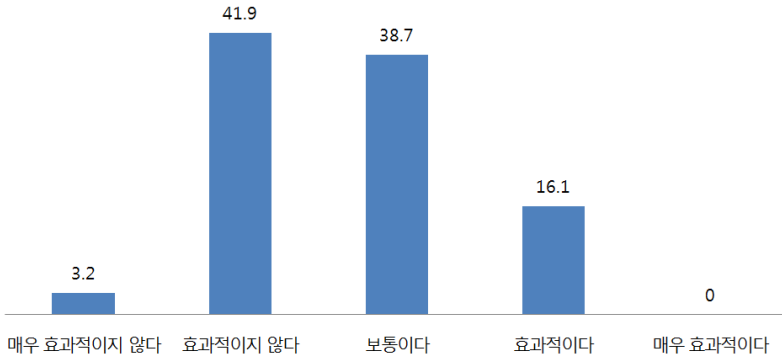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공공외교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1) 북핵문제 해결의 위한 노력,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성과

〈그림 II-2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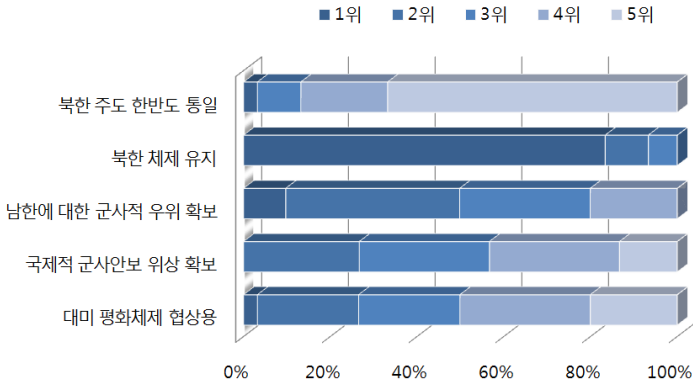
통일관련 공공외교, 즉 북핵 관련 공공외교에서는, 첫 번째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아보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8.7%로 그 뒤를 이었다.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으며,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평가, 통일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그림 II-28〉 북한의 핵개발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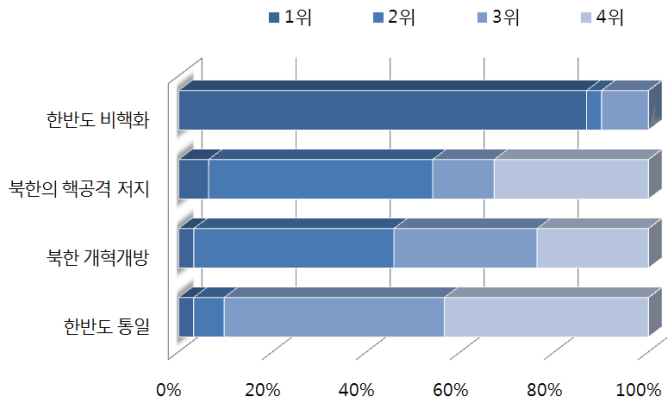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관해서는,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북한 체제 유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이라는 5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 체제 유지’가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3위는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4위는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 5위는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체제 유지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공격 저지,’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로 이루어진 4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는 이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북한의 핵공격 저지,’ 3위는 ‘북한의 개혁·개방’이었으며, ‘한반도 통일’은 가장 낮은 4위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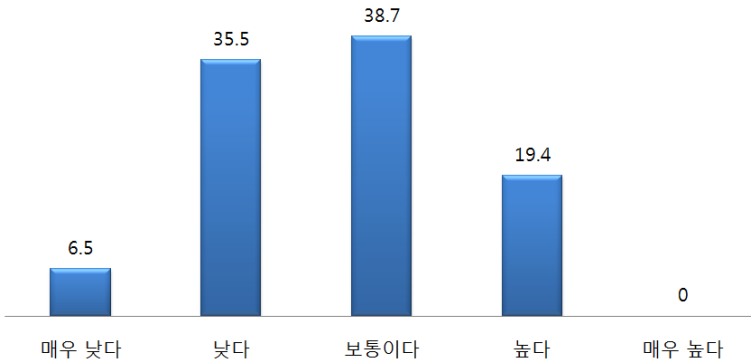
에 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북핵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인식은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II-2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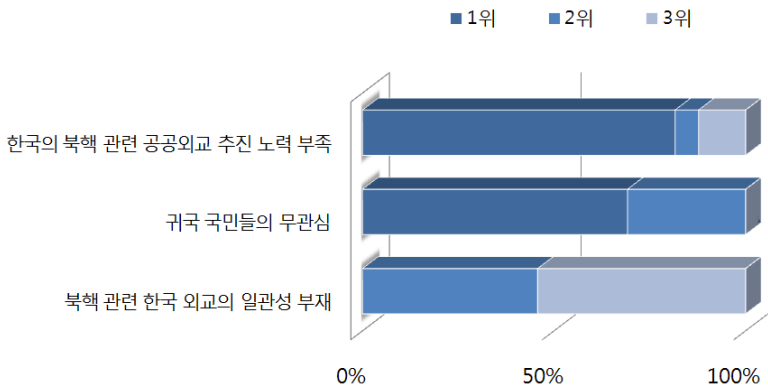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 후 해당점수에 표시토록 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

I
II
III

으며, '낮다'가 35.5%로 그 뒤를 따랐다. '높다'라는 응답은 19.4%를 차지했으며, '매우 낮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6.5%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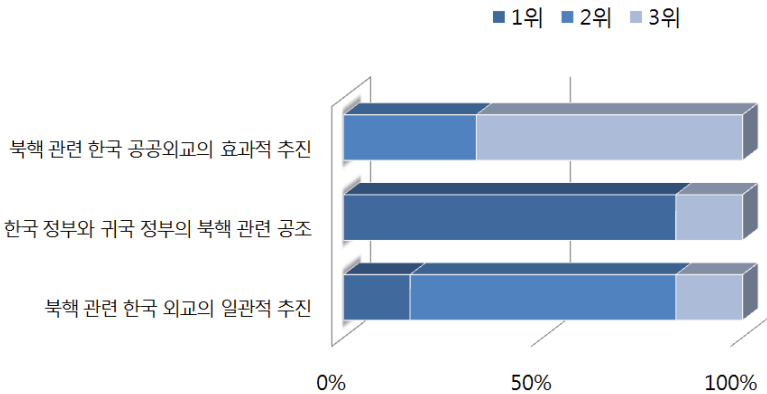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북핵 관련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 '미국 국민들의 무관심,'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라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영향력이 '낮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이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미국 국민들의 무관심,' 3위는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였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미국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온 것이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문항에서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의 영향,’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원인이 이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였으며, 2위는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 3위는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북핵 관련 공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므로써 한미 정책 공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읽을 수 있다.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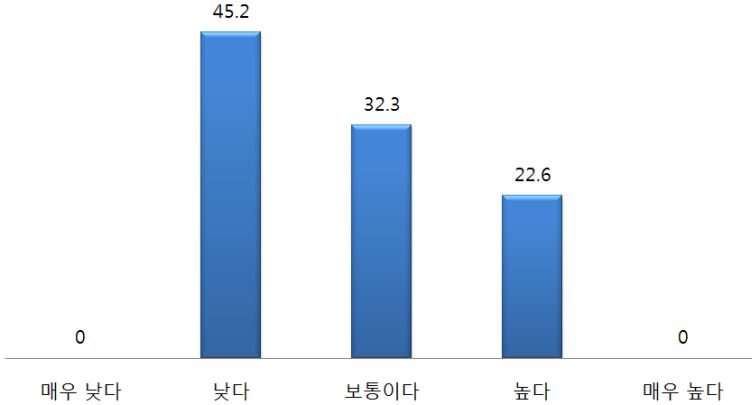
I

II

III

〈그림 II-33〉 북핵 정책 수행 시, 미국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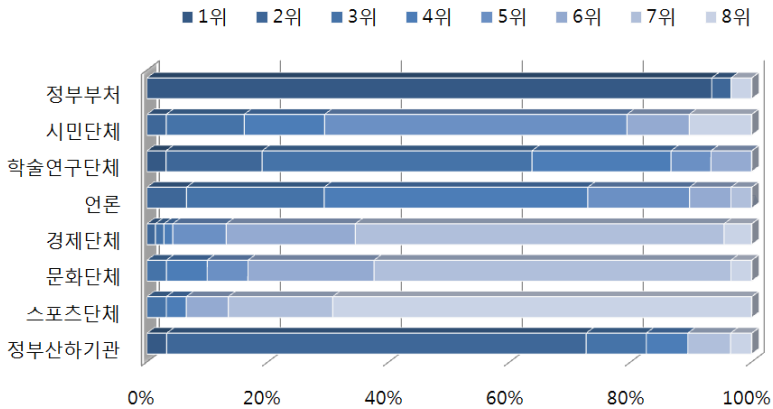
미국 정부가 북핵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 후, 해당 점수에 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낮다’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2.3%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높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22.6%를 기록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북핵문제 같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여론 수렴도가 낮다는 점이 흥미롭다.

2)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 주체 및 추진체계의 특징

앞서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체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으로 이루어진 8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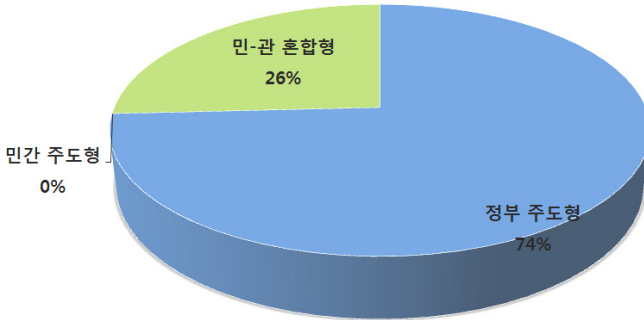
나타났다.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학술연구단체,’ 4위는 ‘언론’이었으며, ‘시민단체’가 5위, ‘문화단체’가 6위, ‘경제단체’가 7위였다. ‘스포츠단체’는 가장 낮은 8위를 기록했다. 여기서도 역시 정부주도의 한국의 공공외교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34〉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상의 특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하였고, ‘민·관 혼합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26%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II-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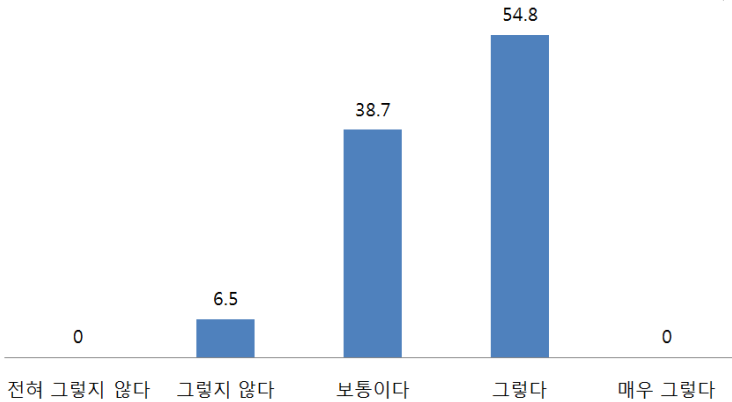
(라) 미국의 특성에 따른 세부 문항 분석

이 파트에서는 특정 국가, 즉, 미국의 특성에 맞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1)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미관계

〈그림 II-3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미관계 증진과의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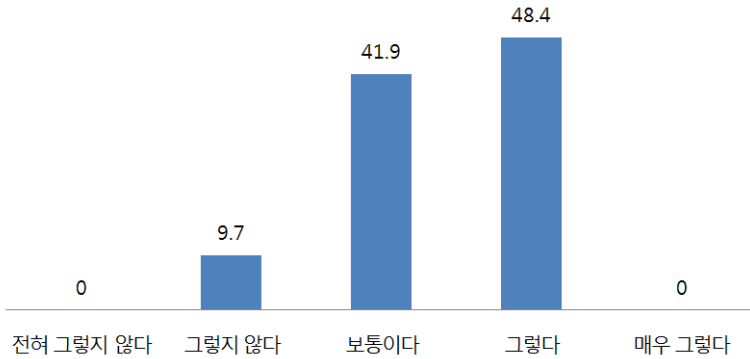


가장 먼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가 한미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

이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38.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6.5%의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볼 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한미 관계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37〉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미국 국민의 한국 이미지

(단위: %)



위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48.4%가 ‘그렇다’라고 반응하였고, ‘보통이다’가 41.9%의 비율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9.7%를 기록하였다.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로 인하여 미국 국민들의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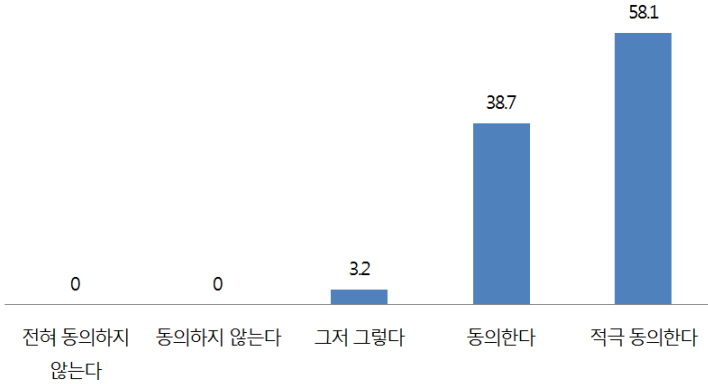
I

II

III

〈그림 II-38〉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동맹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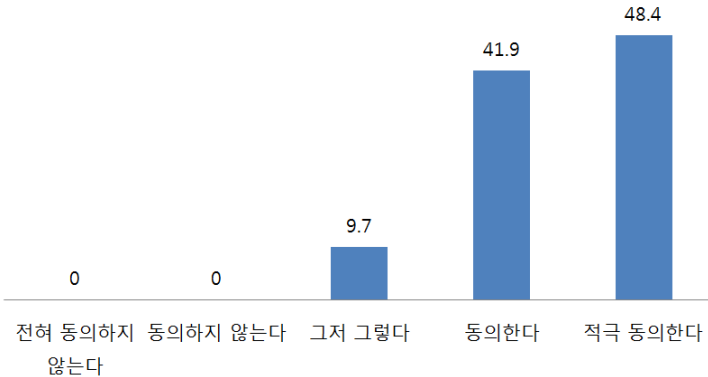
(단위: %)



이어서, 한미동맹의 유지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적극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가 38.7%로 그 뒤를 이었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2%의 비율을 기록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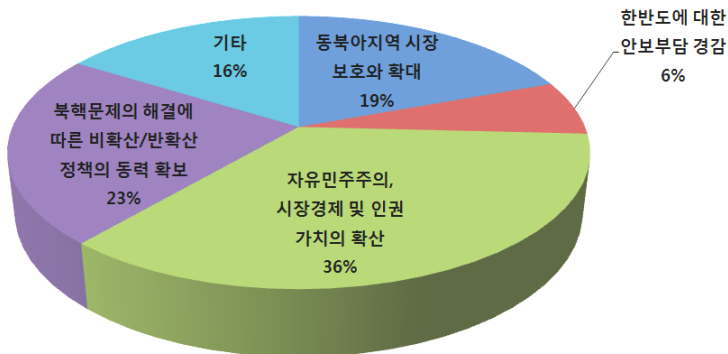
〈그림 II-39〉 한반도 통일을 통한 미국의 이익 여부

(단위: %)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48.4%가 ‘적극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고, ‘동의한다’가 41.9%로 그 뒤를 이었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9.7%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40〉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게 가져 올 이익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인권 가치의 확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6%의 비율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따른 비확산/반확산 정책의 동력 확보’가 2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밖에는 ‘동북아 지역 시장 보호와 확대’가 19%, ‘기타’가 16%,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 경감’이 6%로 나타났다.

(2) 미국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이상에서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일반,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한국의 대미 통일관련 공공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사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둘째, 그들은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과 한미관계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분석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가) 정부 주도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1) 정부 주도형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

위의 조사에서 가장 일관된 응답 중의 하나가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그 수준을 막론하고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외교 일반, 통일공공외교, 통일관련 공공외교 등 여기서 다루어진 모든 수준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한국 공공외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비롯한 선진국들도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주류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정부가 주요 행위자

위에서 언급한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상 특징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주류를 이룬다면 그 주요 행위자는 정부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경우에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등

의 기관에서 공공외교의 큰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부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은 최근 들어 민·관 혼합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동북아와 미국이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대상 지역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은 동북아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네 나라가 복잡한 국제관계로 얽혀 있는 지역이고 각 나라 모두 한반도의 통일에 그들의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노력 또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가장 큰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동북아시아에 전략적으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존재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위해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것도 미국이라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공공외교를 위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해서 상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경제적 자산의 중요성

한국이 공공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은 경제적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에 할 수 있는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학생 대상 혹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가장

I

II

III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비정치적이면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1) 대미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본 조사에서 또 하나의 일관된 발견은 대미 공공외교 특히,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대미 공공외교의 성과 일반에 관한 조사,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관한 조사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 시작했다. 역사가 짧은 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고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외교의 역사가 오래 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⁷⁶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외교의 속성상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만의 통일공공외교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⁷⁶ 박영호 외, 『미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155.

2)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의 중요성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는 북핵문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홍보의 필요성이 통일공공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역시 북한 핵 문제가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 등 다양한 이슈에서 통일공공외교가 필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정책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낮은 평가

직접적인 통일공공외교는 아니지만 한반도 통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공공외교 분야는 북핵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공공외교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작동해야만 해결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공외교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는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I

II

III

투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공공외교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

본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항은 전문가들 사이에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

1) 통일공공외교가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

통일공공외교가 한미관계의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한미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앞으로의 대미 공공외교는 더욱 확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또한 한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루트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본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

본 조사는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또한 역으로 튼튼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과 양국의 국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적인 민간외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한국은 북한의 전한반도 공산화전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주었다. 1953년, 동맹조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도발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의 한미의 연합 훈련 대응,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3~4월 일련의 군사적 위협 공세를 펼쳤을 때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전개했던 강력한 군사적 시위가 대표적 사례이다.

한미 양국은 2013년 동맹 60주년을 맞아 5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 동맹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로 했다.⁷⁷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키며 향후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에게는 안보 공약과 통일 정책의 두 차원에서 미국은 매우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한미 양국은 때때로 불협화음을 겪었다. 한국의 국력이 성장함에 따라 한미관계도 후원-피후원 관계로부터 대등한 관계로 변화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반미(反美)를 외치는 목소리도 분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의존적 인식으로부터 점차 대등하고 독자적인 인식으로

⁷⁷ The White House,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7, 2013.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국의 통일추진과정에서 가장 협력을 얻어야 할 주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2012년 6년 기간 동안의 한반도 주변4국 중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가장 높았다. 매년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최소 53.4%(2007)에서 최대 70.6%(201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친밀감을 느낀 나라인 중국의 최소 14.9%(2010), 최대 2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⁸ 그러나 미국에 대해 느끼는 높은 친밀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같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약 35%만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인식도 중국·일본·러시아의 15% 내외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다.⁷⁹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라고 할지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통일 목표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적 걸림돌로 작용해오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94년 10월 채택된 제네바합의의 산출과정은 미·북 양자 협상에 의한 것이었으며, 9·19 공동성명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의 결과물이나 역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두 합의의 채택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한국의 핵심 정책기제였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한반

⁷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의 변화와 대북·통일 정책의 재정립,”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2), p. 67, <그림 1> 참조.

⁷⁹ 박영호 외, 『미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p. 183.

도 주요 현안 해결, 튼튼한 안보 유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주변국인 것이다.

지난 기간 동안의 대미 통일외교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목표의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활용해서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얻으려 하며,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통일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여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내용의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정책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당면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미공조를 중시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북핵문제의 해결은 통일을 향한 기반 구축의 핵심 전제이지 통일의 비전이나 미래상, 왜 한국 주도의 통일인가와 같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아니다. 또 통일의 대상인 북한체제를 정상화시키는 문제와 통일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 등이 정책내용이지만 통일외교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이나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행위자의 차원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 영역의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지금까지의 통일외교 추진의 주된 행위자는 외교관과 통일부 파견 통일안보주재관,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워싱턴의 한정된 집단에 머무르고 있다.

넷째, 통일외교 추진체계 차원에서 보면, 양자 및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일정책 차원에서보다는 북핵문제와 같은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 수준에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사회 각층이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미래 통일과 관련한 거시적인 관점의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반도 미래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지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통일 외교는 현재 매우 저 발전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 종식을 전후로 하여 과거 서독이 미국을 핵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한 매우 역동적인 통일외교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한국 통일외교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⁸⁰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체계 평가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의 통일과정 진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기반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의 시점을 가능한 한 앞당기고 또한 그 방법을 평화롭게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대하면서도 동시에 추상적이고 막연한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호적인 통일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일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정책, 중국의 부상, 동북아 역내갈등의 심화 등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위 통일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통일외교 중에서도 네트워크화된 국제외교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특히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

⁸⁰ W. R. Smyser, *From Yalta to Berlin: the Cold War Struggle Over Germany* 참고.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자산이고 동시에 북핵문제, 북중관계 등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미국의 역할 및 지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목표의 차원,’ ‘내용의 차원,’ ‘행위자의 차원’ 그리고 ‘추진체계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보이는 핵심적인 특징은 우선 세 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되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핵문제 관련 영역,’ ‘북한 정상화 관련 영역,’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통합(통일) 관련 영역’으로 나뉘서 통일공공외교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내용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행위자 중심성,’ ‘북핵문제 중심성,’ ‘위기 관리 중심성,’ 그리고 ‘리더십 관계에 종속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공공외교가 비정부행위자 차원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정책분야라는 점, 핵문제가 다른 사안들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남북한 사이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그러한 위기는 한미 및 북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 간 국가리더십의 특징에 따라 대북한 정책공조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할만한 분석 결과로 보여 진다.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평가

대미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특징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식외교(인사교류 + 포럼외교)의 압도적 비중과 문화외교의 상대적 미약함, 그리고 미흡한 스포츠 및 미디어 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귀결로 평가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일반적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특수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보다는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매체로 한 한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사교류 사업은 공공외교의 수신 대상을 직접 초청하여 발신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안에 대한 지지세력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부를 필두로 한 정부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현재 미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교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미국 내의 많은 한국교민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공공외교 노력에 더하여 ‘통일’이라는 테마를 앞에 내세운 통일공공외교 노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통일부의 통일공공외교 활동들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통일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통일과 관련하여 대내적 활동 및 대북 활동을 위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부처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과 통일부가 갖는 상징적 위상을 감안할 때 통일공공외교에 쏟는 통일부의 노력이 좀 더 증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교부를 비롯한 기타 공공외교 담당 정부기관과의 업무적 협조를 통하여 가능하기도 하지만, 통일부 자체의 추진력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해외에서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통일안보주재관의 숫자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통일공공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공공외교의 또 다른 주체로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나, 문화적 공공외교가 통일이라는 주제와 결합된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문화행사에서 통일 필요성의 의도적 부각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오랜 통일국가의 전통이 은연중에 부각되어진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문화적 접근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사 속에 통일의 테마를 드러나지 않게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지식외교와 문화외교의 경우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매우 많은 통일공공외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반면에, 스포츠외교와 미디어외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스포츠외교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활약했거나 활약하고 있는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함으로써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외교의 경우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미국의 대중이 보다 쉽게 한국의 상황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방법으로서 통일부와 아리랑TV, KBS World Radio의 협업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부행위자들의 경우 그 활동이 수신국 국민들로 하여금 별다른 저항감 없이 발신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공공외교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까닭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 활동에 있어 의도성이 지나치게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본문 중 사례로서 제시한 시민참여센터의 활동은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판단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미국의 정책서클을 향해 한국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외교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일반,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한국의 대미 통일 관련 공공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국의 공공외교, 특히 통일공공외교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다. 이 절에서는 위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사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둘째, 그들은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과 한미관계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분석 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1) 정부 주도의 대미 통일공공외교

(가) 정부 주도형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

위의 조사에서 가장 일관된 응답 중의 하나가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그 수준을 막론하고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외교 일반, 통일공공외교, 통일관련 공공외교 등 여기서 다루어진 모든 수준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한국 공공외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비롯한 선진국들도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주류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나) 정부가 주요 행위자

위에서 언급한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상 특징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가 주류를 이룬다면 그 주요 행위자는 정부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경우에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등의 기관에서 공공외교의 큰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부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은 최근 들어 민·관 혼합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동북아와 미국이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대상 지역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은 동북아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네 나라가 복잡한 국제관계로 얽혀 있는 지역이고 각 나라 모두 한반도의 통일에 그들의 이해

I

II

III

관계 또한 얽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노력 또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가장 큰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동북아시아에 전략적으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존재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위해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것도 미국이라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공공외교를 위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해서 상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경제적 자산의 중요성

한국이 공공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은 경제적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에 할 수 있는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학생 대상 혹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비정치적이면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가) 대미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본 조사에서 또 하나의 일관된 발견은 대미 공공외교 특히,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대미 공공외교의 성과 일반에 관한 조사,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관한 조사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도 늘리기 시작했다. 역사가 짧은 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고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외교의 역사가 오래 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⁸¹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외교의 속성상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만의 통일공공외교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의 중요성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는 북핵문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홍보의 필요성이 통일공공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역시 북한 핵문제가 통일공공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 한반도 통일이 필요성 홍보 등 다양한 이슈에서 통일공공외교가 필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정책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⁸¹ 박영호 외, 『미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p. 155.

(3)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

(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낮은 평가

직접적인 통일공공외교는 아니지만 한반도 통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공공외교 분야는 북핵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공공외교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작동해야만 해결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공외교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는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공공외교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

본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항은, 전문가들 사이에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

(가) 통일공공외교가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

통일공공외교가 한미관계의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한미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앞으로의 대미 공공외교는 더욱 확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또한 한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루트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본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나)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

본 조사는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또한 역으로 튼튼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과 양국의 국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적인 민간외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조한 인식

(가) 공공외교의 목표로서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저조

본 조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충격적인 결과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공공외교의 목표 중 한반도

I

II

III

통일에 대하여 한반도 국가위상 제고, 국가 이미지 제고, 안보이익 제고, 경제이익 제고 등의 일반적 목표보다 현저히 낮은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통일이 거의 관심 밖의 주제일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의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때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미국 국민들의 한국의 통일의 필요성의 인식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통일공공외교의 다양한 목표

또 한편으로 흥미로운 결과는 응답자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직접적 목표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동아시아 경제 발전,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북한의 변화 유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한국의 통일이 북한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의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가 향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주는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한국이 추진해온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우리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공공외교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전문가들의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색한 평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된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참된 자세가 될 것이다.

2.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시사점 및 과제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향후, 대미 통일공공외교 추진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자면, 첫째, ‘추진 주체’의 차원에서 통일외교를 둘러싸고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가 동시에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매우 불명확한 역할 분담은 향후 통일공공외교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체의 차원에서 현재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최종적으로 통일공공외교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체제 전환외교정책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통일공공외교 관련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통일공공외교 ‘자산’의 차원에서 민간분야의 전문가 및 지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정책 영역이 아무리 정부주도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슈의 특징이 참여자의 특징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 기업, NGO, 언론인, 일반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축적한 미국 관련 지식을 통일공공외교 관련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관료, 싱크탱크, 의회 등을 상대로 집중되고 있는 대미 통일공공외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사회적 다양성이 매우 광범위한

I

II

III

사회이다. 사회구성원의 성격과 정체성이 매우 차별적인데, 결과적으로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가 어떤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키 어렵다. 특히 공공외교의 특성상 특정 외교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미국 내 여론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이 보다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사회 각층이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미래 통일과 관련한 거시적인 관점의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반도 미래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지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통일 외교는 현재 매우 저발전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을 동맹 역사를 간직한 미국을 활용하여 북한을 상대로 한국이 중심이 되는 통일과정의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통일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안보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시사점 및 과제

(1)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체계 시사점 및 과제

주변4국 중 한반도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가 미국으로 인식된다고 하여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또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정치지도자들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미국은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에 담긴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전략,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전략 또는 정책 방안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 주도의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담론과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치권, 정책전문가 집단은 물론 주요 정책영향집단과 일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일담론의 개발과 추진이다.

셋째, 통일의 추진과정과 통일 이후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자 차원의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양자 간의 고위 전략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정례적인 협의 때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2)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추진실태 시사점 및 과제

본 연구는 통일공공외교를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에 충실할 때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분단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해결방식에 대한 제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민족의 평화애호성, 한국의 비핵 평화 지지, 성공적 경제발전과 민주화, 인권에 대한 애호’ 등의 이슈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슈의 전달은 대미 외교의 전통적 틀이었던 안보 중심의 냉전형 정무외교와 중상주의형 경제외교의 틀을 극복하고 한 단계 확장된 새로운 틀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이러한 점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며,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 대한 검토는 향후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과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영역과 행위자에 대한 시사점이다. 현재 대미 통일공공외교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영역을 확장하고 행위자를 다변화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미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인사교류외교와 포럼외교를 포괄하는 지식외교에 치중하고 있고, 그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행위자와 1.5트랙 행위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아젠다의 설정과 한국에 우호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지식외교가 가장 효과적이며, 통일이라는 목표를 감안했을 때 일반대중보다는 여론 선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슈의 위계가 사실상 사라진 오늘날 국제관계의 환경과 국내정치가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내정치 상황과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⁸² 미국의 여론 지도층은 물론이요 일반대중에게서도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외교 뿐만 아니라 문화외교, 스포츠외교, 미디어외교 등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실행은 정부행위자와 1.5트랙 행위자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합과 조정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외교의 경우는 물론이요 여타 영역에서도 아젠다의 설정과 인사교류에 있어 중복의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어진다. 한정된 예산과 동원 가능

⁸² Richard H. Solomon and Nigel Quinney, *American Negotiating Behavior: Wheeler-Dealers, Legal Eagles, Bullies, and Preachers* (New York: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0).

한 인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수단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좀 더 효율적인 공공외교의 수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물론 통일 아젠다의 반복적 언급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중복적 초청이 집중의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세력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공외교의 대상이 확대·분산되어야 함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차원과 1.5트랙 차원의 노력들은 총체적으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과 1.5트랙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통합·조정되어 그 방향성과 실행방법들이 제시될 때 민간차원 행위자들의 활동 또한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외교, 스포츠외교, 미디어외교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문화외교의 경우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형 문화외교 사업’의 테마를 통일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통일에의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현재 미국 내 한국문화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문화사업들이 통일이라는 테마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가능성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실행에는 통일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통일안보조정관이 업무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외교의 경우, 앞에서 제안한 바 있듯이 미국에서 활약했거나 활약하고 있는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 외교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면 이 스타들을 스포츠 외교관으로 임명하여 교육·훈련하여 그 소관 업무에 통일공공외교를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인력의 활용은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외교의 경우, 미국의 VOA 방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의해 지원되는 매체를 양성하거나, 현재 작동하고 있는 아리랑TV나 KBS World Radio의 프로그램 중에서 통일에 할애되는 부분을 심화·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통일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과 혼합되어 전달됨으로써 통일공공외교의 수신자가 노출된 목표의식에 의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민간차원의 행위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대상에는 한국 내의 민간행위자들은 물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720만(재외국민 279.6만 및 외국국적동포 447.2만)명에 달하며 그중 미국에만 217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⁸³ 이들 재외동포들은 통일공공외교의 실행에 있어 현지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가장 효과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일찍이 케난이, “외교관 없는 외교”라고 표현했듯이,⁸⁴ 이들 민간차원의 행위자들이야말로 수신국의 대중으로 하여금 발신국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율적이고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외교관인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공공외교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활동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통일이라는 테마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정부와 기업 간의 매우 섬세한 조정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의 지원이나 방향성 제시가 간섭이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⁸³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분포상황,” 『재외동포 현황과 주요 현안』 (서울: 재외동포재단, 2012).

⁸⁴ George F. Kennan, “Diplomacy Without Diplomats?”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대사회봉사활동에 정부의 지원과 방향성 제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넷째, 각 분야별 공공외교 노력이 행위자 간에 중복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특히 지식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통일’이라는 테마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공공외교의 수단과 대상(target)에 대한 혼선을 가져오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트랙 행위자들이나 1.5트랙 혹은 2트랙 행위자들 모두에 해당된다. 물론 1.5트랙 행위자나 2트랙 행위자들의 활동에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존재하거나 모든 공공외교 노력이 통합된 통제센터(Control Tower)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통합된 공공외교 활동들은 어떤 면에서 수신국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공외교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목적을 고려한다면 효율성, 체계성,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한 조정과 협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협력의 과정이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공공외교를 통한 통일 분야의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평화통일의 튼튼한 기반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분산되어 있는 1트랙 행위자들의 통일공공외교 활동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5트랙과 2트랙행위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실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즉 ‘통일’이라는 목표의식이 모든 공공외교 활동에 있어 좀 더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공공외교 활동들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라는 주제만을 분리하여

본다면, 그 정도가 거의 미미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의 개선과 우리나라에 대한 친화성을 높이는 마음의 저변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식의 표출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해결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명규 외.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2012.
-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미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2012 한미동맹 자료집』. 서울: 국방부, 2012.
- Alexander T. J. Lennon and Camille Eiss.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IT Press, 2004.
-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Washington, D.C.: CSIS, 2011.
- Dean P. Chen. *US Taiwan Strait Policy: The Origins of Strategic Ambiguity*.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12.
- Evans J. R. Revere. *The U.S.-ROK Relations in President Obama's Second Term: Managing Challenges and Changes*, Brook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2013.
- Hwang Eui-Gak. *The Search for A Unified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New York: Springer, 2010.
-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MacMillan, 2008.
-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Arlington, Virginia: Ecco, 2011.
- W. R. Smyser. *From Yalta to Berlin: the Cold War Struggle Over German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2. 논문

-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제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II)』.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 정책포럼』. 2011.
- 박인휘. “한반도 안보-안보부재의 정치학: 한미-남북 관계의 모순적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11
- _____. “박정희, 김대중의 국가이익과 한미관계: 동맹-자주의 분절 혹은 통합.”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 (세계지역학회), 2010.
- _____. “세계화시대의 외교정책과 싱크탱크: 정책지식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국제정치학회), 201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의 변화와 대북·통일정책의 재정립.”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2.
- 외교안보문제연구소 편.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문제연구소, 2013.
-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집 3호(국제정치학회), 2011.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집 2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조동준. “외교정책결정자 심리분석의 유용성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분포상황.” 『재외동포 현황과 주요 현안』. (재외동포재단), 2012.
- _____. “중국의 신형대국외교: 부상한 중국의 새로운 외교구상.” 『성균차이나포커스』. 제6호, 2013.
- David Kang and Victor Cha. “Think Again: North Korea,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No. 199. March/April 2013.

David Kang.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Pacific Focus*. Vol. 24, No. 1, 2009.

George F. Kennan. "Diplomacy Without Diplomats?"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Sunhyuk Kim and Wonhyuk Lim. "How to Deal with Sou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Spring 2007.

胡锦涛,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为夺取全面建设小康社会新胜利而奋斗." 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报告, 2007.

3. 기타 자료

『조선중앙통신』.

통일부.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통일부 Online, 2013.5.10.

조선중앙통신.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Online, 2013.3.15.

국기원. <www.kukkiwon.or.kr>.

국립국제교육원. <www.niied.go.kr>.

국제교류재단. <www.kf.or.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nuac.go.kr>.

세종학당. <www.sejonghakhadang.org>.

아리랑 TV. <www.arirang.co.kr>.

외교부. <www.mofa.go.kr>.

외교통일위원회(국회). <www.uft.na.go.kr>.

인터넷 통일방송(통일부). <www.unikorea.go.kr>.

코리아소사이어티. <www.koreasociety.org>.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문화원. <www.mcst.go.kr>.

한미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KBS WORLD. <www.world.kbs.co.kr>.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